

연구보고서(수시) 2023-03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김성아
고든솔·신영규·이소영·조성은·노현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23-03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02)3486-679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42-3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b.2023.03>

발|간|사

2020년 세계를 뒤덮은 팬데믹이 어느새 지난 일이 되었다.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다. 팬데믹 시기에는 경색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선택했지만, 이제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을 시도한다. 감염 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지만 고립의 경험이 낫설지 않아졌다. 이렇듯 갑자기 맞닥뜨린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상(New Normal)의 시대에 변화의 상흔을 찾아 후유증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사회정책의 역할 중 하나이다.

사회 변화는 개인의 일상에서 비로소 생생한 의미를 가진다. 변화는 역사적 사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유의미한 정책 개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과 정책 성과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감지할 수도 있고, 예상되는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 연구(2022년)」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22년 연구의 후속 과업으로, 선행연구에서 작성한 사회정책 성과 분석틀을 개선하고, DB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기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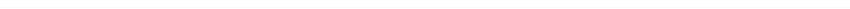
이 연구는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고든솔 부연구위원,

신영규 부연구위원, 이소영 연구위원, 조성은 연구위원, 그리고 노현주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반가운 박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자문 의견을 주셨다. 그 외에도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와 자문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	17
제1절 분석틀 개선 조사 개요	19
제2절 보건 의료 분야	21
제3절 소득과 주거 분야	34
제4절 사회서비스 분야	48
제5절 인구 분야	56
제6절 사회보장 일반	70
제3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DB 구축 방안	85
제1절 보건 의료 분야	87
제2절 소득과 주거 분야	93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103
제4절 인구 분야	109
제5절 사회보장 일반	119

제4장 결론 및 제언	129
제1절 요약 및 결론	131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방안	132
참고문헌	137
부록	143
[부록 1]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143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1〉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	4
〈표 1-1〉 주요 국책 연구기관의 동향 분석 현황 (2023.2. 기준)	12
〈표 2-1〉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대상(안)	19
〈표 2-2〉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개요	20
〈표 2-3〉 기대수명, 건강수명 지표의 필요성	21
〈표 2-4〉 주관적 건강상태 지표의 필요성	22
〈표 2-5〉 자살률 지표의 필요성	23
〈표 2-6〉 우울감 경험률 지표의 필요성	23
〈표 2-7〉 흡연율 지표의 필요성	25
〈표 2-8〉 음주율 지표의 필요성	25
〈표 2-9〉 비만율 지표의 필요성	26
〈표 2-10〉 미충족의료 경험률 지표의 필요성	27
〈표 2-11〉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의 필요성	28
〈표 2-12〉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지표의 필요성	29
〈표 2-13〉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29
〈표 2-14〉 보건의료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31
〈표 2-15〉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33
〈표 2-16〉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34
〈표 2-17〉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35
〈표 2-18〉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36
〈표 2-19〉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36
〈표 2-20〉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지표의 필요성	37
〈표 2-21〉 연령집단별 빈곤율 지표의 필요성	38
〈표 2-22〉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 지표의 필요성	38
〈표 2-23〉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지표의 필요성	39
〈표 2-24〉 구직 취약계층 지표의 필요성	40
〈표 2-25〉 기준중위소득 지표의 필요성	41

〈표 2-26〉 주요 소득보장 수급률 지표의 필요성	42
〈표 2-27〉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지표의 필요성	43
〈표 2-2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표의 필요성	44
〈표 2-29〉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지표의 필요성	45
〈표 2-30〉 소득과 주거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46
〈표 2-31〉 소득과 주거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들	48
〈표 2-32〉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지표의 필요성	49
〈표 2-33〉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지표의 필요성	50
〈표 2-34〉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지표의 필요성	50
〈표 2-35〉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지표의 필요성	51
〈표 2-36〉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지표의 필요성	51
〈표 2-37〉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지표의 필요성	52
〈표 2-38〉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지표의 필요성	53
〈표 2-39〉 사회서비스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54
〈표 2-40〉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들	55
〈표 2-41〉 (정태) 인구 규모 지표의 필요성	56
〈표 2-42〉 (정태) 부양비 지표의 필요성	58
〈표 2-43〉 (동태) 인구이동률 지표의 필요성	59
〈표 2-44〉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 지표의 필요성	60
〈표 2-45〉 1인가구 지표의 필요성	61
〈표 2-46〉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의 필요성	62
〈표 2-47〉 합계출산율 지표의 필요성	63
〈표 2-48〉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의 필요성	64
〈표 2-49〉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의 필요성	65
〈표 2-50〉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의 필요성	66
〈표 2-51〉 인구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68
〈표 2-52〉 인구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들	69



〈표 2-53〉 행복 지표의 필요성	71
〈표 2-54〉 삶의 질 지표의 필요성	71
〈표 2-55〉 사회적 고립 지표의 필요성	72
〈표 2-56〉 갈등 및 차별 인식 지표의 필요성	73
〈표 2-57〉 사회적 자본 지표의 필요성	74
〈표 2-58〉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지표의 필요성	75
〈표 2-59〉 총사회지출 지표의 필요성	76
〈표 2-60〉 분야별 사회지출 지표의 필요성	76
〈표 2-61〉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지표의 필요성	77
〈표 2-62〉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지표의 필요성	78
〈표 2-63〉 경제성장률 지표의 필요성	79
〈표 2-64〉 물가상승률 지표의 필요성	80
〈표 2-65〉 기후변화 지표의 필요성	81
〈표 2-66〉 사회보장 일반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82
〈표 2-67〉 사회보장 일반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83
〈표 3-1〉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91
〈표 3-2〉 소득과 주거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100
〈표 3-3〉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107
〈표 3-4〉 인구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118
〈표 3-5〉 사회보장 일반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127

그림 목차

[그림 1-1]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현안 보고서 발간 사례	13
[그림 3-1] 인구동향조사 업무흐름도	113
[그림 3-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다 나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지표체계 변화 ..	120
[그림 3-3]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문항	121



Abstract

A Study on the Basis of the Social Trends Monitoring

Project Head: Kim, Seo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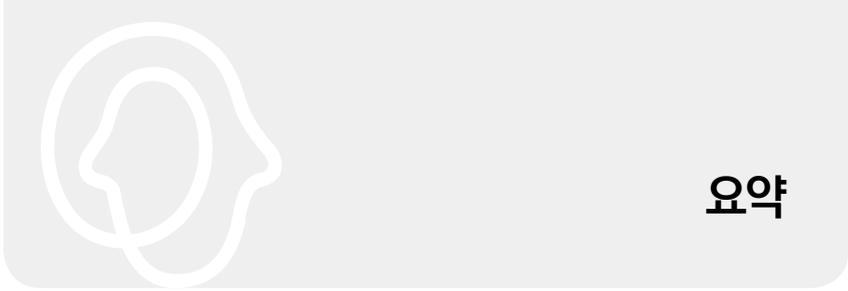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This research project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re has been little comprehensive analysis of periodic trends in Korea's social policies. As a follow-up to "A Preliminary Study of Social Trends Monitoring (2022)," which developed a trend analysis framework centered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and attempted to analyze trends by policy area, this project carries out two tasks. The first task involves publishing a report on social security trends in income, housing, and healthcare, as well as an English-language version for wider dissemination. The second task, the research aim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trend analysis framework created in the basic study in 2022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periodic policy trend analysis system and to refine the plan for building a database.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social policy experts, including academics, policymakers, and journalists, as well as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trend analysis framework for periodic management of performance and trends in five areas: health, income and

Co-Researchers: Go, Dun-Sol, Shin, Young-Kyu, Lee, So-Young, Cho, Sungeun, Noh, Hyunju

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housing, social services,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in general. We presented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each area and, using the improved trend analysis framework,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ources to build a database of social policy performance trend indicators. Specifically, we identified the entities responsible for data production and management, the production cycle, and the practical availability of data sources, as well as matt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database. Finally, we synthesized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ed tasks for the regularization and upgrading of social policy performance and trend analysis in the future.

Keyword : social policy,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social indicator, Trend Monitoring



요약

1.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사회정책 전반의 주기적인 동향의 종합 분석이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동향 분석틀을 개발하고 정책 분야별 동향 분석을 시도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2022)」의 후속 작업으로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소득과 주거 및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보장 동향 보고서와 한국 사회보장 동향 분석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영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둘째, 여전히 주기적 정책 동향 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22년 기초 연구에서 작성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고 DB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과업이 이 연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학계 전문가, 정책결정자, 그리고 언론인 등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응답자는 103명이다(〈표 2-2〉 참조). 그중에서 학계 전문가는 65명으로 63.1%, 정부기관에 소속된 정책결정자는 12명으로 11.7%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은 26명으로 25.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가 7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건의료 분야 전공자가 18명, 그 외 분야 전공자가 8명이었다. 또한 전문가 조사

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2장에서 보건의료, 소득과 주거, 사회 서비스, 인구, 사회보장 일반의 5개 분야별 성과 및 동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였다. 지표의 필요성을 고려해 영역별 대표지표를 제안하였다.

〈요약표 1〉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

(단위: 점)

영역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보건 의료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10대 사망원인	★	신규 신규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상 유병률 자살생각률 자살률	★ ★	보완 신규
	건강행태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미충족의료 경험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	신규
소득과 주거	가계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가계 총자산/순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 ★	보완
	소득분배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연령집단별 빈곤율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	★ ★ ★	
	경제활동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구직 취약계층	★	
	정책 수요 및 공급	기준중위소득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	

영역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 ★ ★	신규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	
인구	인구	(정태) 인구 규모 (정태) 부양비 (동태) 인구이동률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	★ ★	삭제
	가구	1인가구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	
	혼인·출산	합계출산율 결혼이민자 비율 조출생률 조혼인율	★	삭제 신규 신규
	돌봄·양육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휴직자 수	★	
사회 보장 일반	행복·삶의 질	행복 삶의 질 사회적 고립	★ ★	삭제
	사회인식	갈등 및 차별 인식 사회적 자본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사회보장재정	총사회지출 분야별 사회지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 ★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후변화	★	

자료: 연구진 작성

개선한 동향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회정책 성과 동향 지표 DB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원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원의 생산 및 관리 주체, 생산주기와 실질적 이용가능성, 그리고 DB화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OECD 등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원은 집계치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거나 사회서비스 분야 동향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3. 제언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정례화와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 성과 동향 지표 DB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지표의 범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정책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모든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지표체계를 주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하여 가장 실효성 높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 분석에 필요한 자료원들을 검토하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주요 정책 데이터 관리 기관과의 협업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정리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거나 별도의

포털사이트(예를 들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널리 배포하여야 주기적 동향 분석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성,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포털의 구축은 유사 통계 포털 들과 중복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우선은 정기적으로 동향 분석 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표의 수집주기를 고려하여 월간, 분기, 연도별 자료 제공이 가능한 지표를 구분하여 정기적인 통계집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사회정책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 상황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향 분석의 주요 필요성 중 하나는 현재 사회 상황의 변화를 포착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 성과 측정이나 변화 예측이 가능한 프레임워크 또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분석된 여러 자료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의 여러 방식을 적용해보고,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 수요자들이 쉽게 시각화 방식을 선택하고 자료를 재구성하여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개발 과정에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작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가 요청된다. 수행인력이 오랜 기간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투자 없이는 단발적인 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용어 : 사회정책, 정책성과, 사회지표, 동향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향 분석틀(framework)에 대한 합의와 주기적인 동향 분석은 비어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사실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주요 국제기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Society at a Glance」, 「Health at a Glance」, 「Education at a Glance」, 「Pensions at a Glance」 등의 주기적인 발간물을 통해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전 지구 거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는 2000년에 채택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2015년에 개선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추적,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 정책 분야별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동향과 정책에의 시사점 등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1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표 1-1〉 주요 국책 연구기관의 동향 분석 현황 (2023.2. 기준)

연구기관	발간물	주요 내용/지표	주기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및 관련 지표, 시사점	반기
	KDI 경제동향	국내총생산, 경기,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및 교역조건,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고용 및 임금, 물가, 금융시장, 세계 경제 동향, 시사점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매매가격, 거래량, 신규주택 공급, 전월세가격 및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분기
	Economic Bulletin	GDP 등 경제활동 지표, 금융시장 지표, 공공경제 지표, 시사점	월간
산업연구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해외 실물 경제,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동향, 시사점	월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 고용 동향(중사상 지위별/산업별/성별/연령별/근로시간집단별 취업자 수, 중사상 지위별/사업체 규모별/산업별 임금임금구성, 근로시간, 노동쟁의 조정사건 및 조정성립률)	월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THE HRD REVIEW (동향지)	고용/노동시장 동향, 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 동향	분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빈곤, 불평등, 자산분포	연간

자료: 김성아 외. (202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1의 표를 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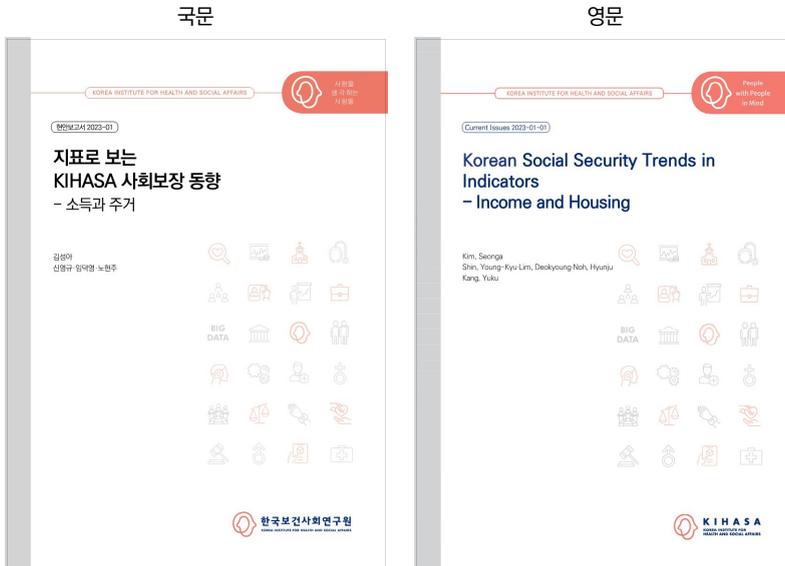
사회정책 분야별로 지표를 통해 정책 성과를 측정, 관리하는 다양한 연구는 다수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장인수, 이소영, 정희선, 고제이, 김세진, 2022; 장인수, 이지혜, 이선희, 이소영, 박종서, 2023), 보건의료(전진아 외, 2018; 강희정 외, 2019), 식품안전(박은자 외, 2019), 공적연금(신화연, 최기홍, 김종훈, 신승희, 2020), 지역균형발전(강혜규 외, 2015; 강혜규 외, 2018), 사회통합(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강신욱, 노대명, 박수진, 전지현, 2011;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 2012; 정해식 외, 2016; 최현수, 한솔희, 천미경, 진재현, 2019; 정해식

외, 2021) 등 정책 영역별 대표적인 최근 연구 사례들이 있다. 아동정책 (임정미 외, 2019; 임성은, 이상정, 전진아, 조영림, 2020; 이상정 외, 2022), 자영업자(황남희 외, 2019), 이주배경주민(송철중 외, 2020), 북한 주민 (조성은 외, 2021; 조성은 외, 2022) 등 대상별 정책 성과를 측정, 관리하고자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사회정책 전반의 주기적인 동향의 종합 분석은 여전히 비어 있는 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2022)」를 통해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동향 분석틀을 개발하고 정책 분야별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소득과 주거 및 보건 의료 분야의 사회보장 동향 보고서와 한국 사회보장 동향 분석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영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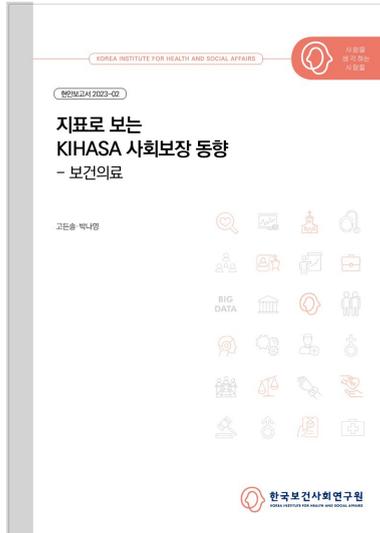
[그림 1-1]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현안 보고서 발간 사례

〈 소득과 주거 편 〉



1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 보건의료 편 >



- 자료: 1) 김성아,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3).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Kim, Seonga, Shin, Young-Kyu, Lim, Deokyoung, Noh, Hyunju, Kang, Yuku. (2023). Korean Social Security Trends in Indicators: Income and Housing.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 고든솔, 박나영. (2023).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여전히 주기적 정책 동향 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은 부족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표로 보는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는 동향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기초 연구에서 작성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고 DB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정책 동향 분석의 잠재적 수요자인 정책결정자 및 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이용자 친화적 동향 분석 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2022년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을 개선한다. 정책 분야별 성과지표 수정 및 개선,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지표 체계를 개선한다.

둘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DB 구성 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정책 성과지표 수집 및 생산을 위한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자료유형, 생산 및 배포 시기,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방안을 모색한다.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성과지표 시각화 방안, 사회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 방안, 사회정책 동향 DB 구축 및 관리, 활용 방안, 그리고 사회정책 동향 분석 증장기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주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 성과 측정 및 구조화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주기적 동향 분석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동향 분석의 잠재적 수요자인 정책 결정자 및 학계 전문가 약 10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응답식 온라인조사를 채택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마이크로데이터 및 2차 자료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자료 구조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과 사회정책 동향 분석 DB 구성안 및 시각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제2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

제1절 분석틀 개선 조사 개요

제2절 보건의료 분야

제3절 소득과 주거 분야

제4절 사회서비스 분야

제5절 인구 분야

제6절 사회보장 일반

제 2 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

제1절 분석틀 개선 조사 개요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를 유의표집하고자 하였고, 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학계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그리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 표본은 각각 2:1:1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표 2-1〉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대상(안)

구분	목표 표본	내용
학계 전문가	50명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약 400명)
정책결정자	25명	보건복지 분야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언론인	25명	복지부 출입 기자단
합계	100명	

자료: 연구진 작성

조사 방법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웹조사를 채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소속기관 유형과 전공 분야의 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여섯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분야별 핵심 지표의 필요한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분야별 지표 보완 의견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분야별 지표 추가 의견이었고, 네 번째 질문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분야별 삭제 의견이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내 분야 및 세부 영역 구성 의견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 <표 2-2>는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의 개요이다. 조사는 2023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 동안 실시되었다. 최종 응답자는 103명으로 목표 표본을 초과하였고, 그중에서 학계 전문가는 65명으로 63.1%, 정부기관에 소속된 정책결정자는 12명으로 11.7%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은 26명으로 25.2%를 차지하였다. 목표 표본 구성 대비 정책결정자의 응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학계 전문가의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가 7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건의료 분야 전공자가 18명, 그 외 분야 전공자가 8명으로 나타났다.

<표 2-2>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개요

(단위: 명, %)

구분	내용			
조사목적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	비율
	전체	계	103	100.0
	소속기관	학교/연구기관	65	63.1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12	11.7
		언론	26	25.2
	전공	보건의료 분야	18	17.5
사회과학 분야		77	74.8	
기타		8	7.8	
조사기간	2023.6.9.~6.20.			
조사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보건의료 분야

1. 전문가 조사 결과

가. 건강수준

국가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응답자 모두가 필요하다(필요하다 34.0%, 매우 필요하다 66.0%)고 평가하였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0%로 응답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학교/연구기관(78.5%)에서 가장 높았고, 언론(46.2%),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41.7%) 순이었다. 전공에 따라서는 보건의료 분야 66.7%, 사회과학 분야 66.2%, 기타 62.5%로 전공과 관계없이 6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기대수명, 건강수명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③필요하다	34.0	21.5	58.3	53.8	33.3	33.8	37.5
④매우 필요하다	66.0	78.5	41.7	46.2	66.7	66.2	62.5
불필요(1+2)	0.0	0.0	0.0	0.0	0.0	0.0	0.0
필요(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2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주관적 건강상태 지표는 전문가 응답자의 88.3%(필요하다 52.4%, 매우 필요하다 35.9%)가 건강수준의 핵심 지표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소속기관에 따라 학교/연구기관이 90.8%, 언론 84.6%,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은 83.3% 순으로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소속기관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16.7%, 언론 15.4%, 학교/연구기관 9.2% 순이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한 사례는 없었다.

〈표 2-4〉 주관적 건강상태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1.7	9.2	16.7	15.4	16.7	11.7	0.0
③필요하다	52.4	43.1	75.0	65.4	55.6	50.6	62.5
④매우 필요하다	35.9	47.7	8.3	19.2	27.8	37.7	37.5
불필요(1+2)	11.7	9.2	16.7	15.4	16.7	11.7	0.0
필요(3+4)	88.3	90.8	83.3	84.6	83.3	88.3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자살률이 건강수준의 핵심 지표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98.1% (필요하다 30.1%, 매우 필요하다 68.1%)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 1.9%로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학교/연구기관 응답자의 3.1%, 전공에 따라서는 사회과학 분야 응답자의 2.6%였다.

〈표 2-5〉 자살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9	3.1	0.0	0.0	0.0	2.6	0.0
③필요하다	30.1	27.7	33.3	34.6	38.9	28.6	25.0
④매우 필요하다	68.0	69.2	66.7	65.4	61.1	68.8	75.0
불필요(1+2)	1.9	3.1	0.0	0.0	0.0	2.6	0.0
필요(3+4)	98.1	96.9	100.0	100.0	100.0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우울감 경험률 지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92.2%(필요하다 37.9%, 매우 필요하다 54.4%)였다.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서 언론 96.2%,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91.7%, 학교/연구기관 90.8%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에 따라서는 사회과학 분야 93.5%, 보건의료 분야 88.9%, 기타 87.5% 순이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0%로 학교/연구기관 응답자의 1.5%, 사회과학 분야 응답자의 1.3%였다.

〈표 2-6〉 우울감 경험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6.8	7.7	8.3	3.8	11.1	5.2	12.5
③필요하다	37.9	33.8	41.7	46.2	33.3	40.3	25.0
④매우 필요하다	54.4	56.9	50.0	50.0	55.6	53.2	62.5
불필요(1+2)	7.8	9.2	8.3	3.8	11.1	6.5	12.5
필요(3+4)	92.2	90.8	91.7	96.2	88.9	93.5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본 조사에 포함한 네 개의 지표의 필요도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은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100.0%, 주관적 건강상태 88.3%, 자살률 98.1%, 우울감 경험률 92.2%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88.7점, 자살률 88.7점, 우울감 경험률 81.9점, 주관적 건강상태 74.8점 순으로 높았다.

건강수준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집한 결과,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에 대한 의견으로는 건강수명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질 의 방식과 답안의 검토, 통계 모니터링의 부적절성 등)과 건강수명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지표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국제 비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자살률의 경우, 인구집단별로 세분화(지역·원인·소득 수준 등)된 자살률 지표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자살생각률 또는 자해 경험에 대한 지표를 추가 제시하고, 자살 예방 관련 서비스(예방센터, 응급 대기 소요시간 등) 이용 경험에 대한 지표도 넣기를 희망하였다. 우울감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우울감을 측정하는 방법(CES-D 국제공인 척도의 사용, 전문 도구 적용) 개선에 대한 의견, 우울감 및 우울증 유병률에 대한 국제비교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울감 외 다른 정신 건강 관련 지표를 추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나. 건강행태

국민의 건강행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흡연율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응답자의 94.2%(필요하다 57.3%, 매우 필요하다 3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 언론 96.2%, 학교/연구기관 95.4%,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83.3%가 흡연율 지표가 필요하다고

2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②필요하지 않다	4.9	6.2	0.0	3.8	11.1	3.9	0.0
③필요하다	58.3	60.0	91.7	38.5	50.0	59.7	62.5
④매우 필요하다	36.9	33.8	8.3	57.7	38.9	36.4	37.5
불필요(1+2)	4.9	6.2	0.0	3.8	11.1	3.9	0.0
필요(3+4)	95.1	93.8	100.0	96.2	88.9	96.1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비만을 지표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2%(필요하다 44.7%, 매우 필요하다 4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라서 정부 부처 및 정부기관 100.0%, 언론 96.2%, 학교/연구기관 90.8% 순으로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불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8%였으며, 학교/연구기관 응답자의 9.2% 및 언론 응답자의 3.8%였다.

〈표 2-9〉 비만을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0.0	0.0	3.8	0.0	0.0	12.5
②필요하지 않다	5.8	9.2	0.0	0.0	5.6	6.5	0.0
③필요하다	44.7	40.0	75.0	42.3	50.0	44.2	37.5
④매우 필요하다	48.5	50.8	25.0	53.8	44.4	49.4	50.0
불필요(1+2)	6.8	9.2	0.0	3.8	5.6	6.5	12.5
필요(3+4)	93.2	90.8	100.0	96.2	94.4	93.5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건강행태 지표로 본 조사에 포함된 세 개의 지표의 필요도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은 흡연율 94.2%, 음주율 95.1%,

비만을 93.2%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비만을 80.3점, 음주율 77.3점, 흡연율 77.0점 순으로 높았다.

건강행태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집한 결과, 흡연율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율 정의(국제 기준, 전자담배 등 흡연 방식 구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금연 후 재흡연율 등)이 있었다. 음주율의 경우에도 지표 정의와 관련한 의견(고위험 음주 정의 및 분류 검토),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음주율 산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비만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구집단 특성(성별·나이별)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응답자 89.3%가 필요하다(필요하다 33.0%, 매우 필요하다 56.3%)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교/연구기관 92.3%, 언론 88.5%,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75.0%였으며,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보건의료 분야 94.4%, 사회과학 분야 88.3%, 기타 87.5%였다.

〈표 2-10〉 미충족의료 경험을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3.1	0.0	0.0	5.6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8.7	4.6	25.0	11.5	0.0	10.4	12.5
③필요하다	33.0	29.2	25.0	46.2	27.8	29.9	75.0
④매우 필요하다	56.3	63.1	50.0	42.3	66.7	58.4	12.5

28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불필요(1+2)	10.7	7.7	25.0	11.5	5.6	11.7	12.5
필요(3+4)	89.3	92.3	75.0	88.5	94.4	88.3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3% (필요하다 35.9%, 매우 필요하다 5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 기관에 따라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응답자의 91.7%, 학교/연구기관 응답자의 90.8%, 언론 응답자의 8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필요하지 않다’ 8.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였다.

〈표 2-11〉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8.7	7.7	8.3	11.5	22.2	6.5	0.0
③필요하다	35.9	26.2	50.0	53.8	38.9	31.2	75.0
④매우 필요하다	54.4	64.6	41.7	34.6	38.9	61.0	25.0
불필요(1+2)	9.7	9.2	8.3	11.5	22.2	7.8	0.0
필요(3+4)	90.3	90.8	91.7	88.5	77.8	92.2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지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95.1% (필요하다 44.7%, 매우 필요하다 50.5%)였다.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서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응답자의 100.0%, 언론 응답자의 96.2%, 학교/연구기관 응답자의 9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12〉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3.9	4.6	0.0	3.8	0.0	5.2	0.0
③필요하다	44.7	43.1	33.3	53.8	44.4	42.9	62.5
④매우 필요하다	50.5	50.8	66.7	42.3	55.6	50.6	37.5
불필요(1+2)	4.9	6.2	0.0	3.8	0.0	6.5	0.0
필요(3+4)	95.1	93.8	100.0	96.2	100.0	93.5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필요하다 44.7%, 매우 필요하다 4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언론 92.3%, 학교/연구기관 86.2%,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3.9%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소속기관에 따라서 언론 7.7%, 학교/연구기관 3.1%였다.

〈표 2-13〉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3.9	3.1	0.0	7.7	0.0	3.9	12.5
②필요하지 않다	10.7	10.8	33.3	0.0	0.0	13.0	12.5
③필요하다	44.7	46.2	33.3	46.2	50.0	42.9	50.0
④매우 필요하다	40.8	40.0	33.3	46.2	50.0	40.3	25.0
불필요(1+2)	14.6	13.8	33.3	7.7	0.0	16.9	25.0
필요(3+4)	85.4	86.2	66.7	92.3	100.0	83.1	75.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본 조사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표로 포함한 네 개의 지표의 필요도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 89.3%,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3%,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95.1%,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85.4%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81.6점, 미충족의료 경험률 81.2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81.2점,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74.1점 순이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집한 결과,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인구집단 특성별(지역, 취약계층)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충족의료 경험률 지표와 함께 의료이용량 지표도 제시되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와 관련해서는 세부 분야별 보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완 지표(1인당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과 관련해서는 가구 보건의료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으로 간병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지표 산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용의 범위와 유형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들

보건의료 분야 3개 영역 11개 지표를 대상으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개별 지표별 필요도 점수가 높은 지표는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88.7점), 자살률(88.7점), 우울감 경험률(81.9점).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81.6점), 미충족의료 경험률(81.2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81.2점) 순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수준 영역에서는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지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비만율 지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영역에서는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지표가 가장 필요도가 높은 지표로 평가되었다.

응답한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 필요도를 평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표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은 학교/연구기관에서 필요도가 높게 평가된 지표는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92.8점), 자살률(88.7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84.6점), 미충족의료 경험률(84.1점) 순이었다.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응답 비율이 높아 정책적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는 자살률(88.9점), 가구 보건의료비용 지출 비율(88.9점),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80.6점), 우울감 경험률(80.6점) 순이었다. 언론 소속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 대국민 이해도 및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는 자살률(88.5점), 음주율(84.6점),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82.1점), 우울감 경험률(82.1점), 비만율(82.1점) 순이었다. 세 기관 모두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지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자살률, 우울감 경험률이다.

〈표 2-14〉 보건의료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단위: 점)

세부 영역	측정지표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 의료 분야	사회 과학 분야	기타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88.7	92.8	80.6	82.1	88.9	88.7	87.5
	주관적 건강상태	74.8	79.5	63.9	67.9	70.4	75.3	79.2
	자살률	88.7	88.7	88.9	88.5	87.0	88.7	91.7
	우울감 경험률	81.9	82.1	80.6	82.1	81.5	81.8	83.3
건강행태	흡연율	77.0	77.9	66.7	79.5	75.9	76.6	83.3
	음주율	77.3	75.9	69.4	84.6	75.9	77.5	79.2
	비만율	80.3	80.5	75.0	82.1	79.6	81.0	75.0

3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세부 영역	측정지표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 의료 분야	사회 과학 분야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미충족의료 경험률	81.2	84.1	75.0	76.9	85.2	81.8	66.7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81.2	84.6	77.8	74.4	72.2	84.0	75.0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81.6	81.0	88.9	79.5	85.2	81.0	79.2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74.1	74.4	66.7	76.9	83.3	73.2	62.5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매우 필요하다(4점)”의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전문가 대상 필요도 조사를 통해 지표의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지표(건강수명, 자살률, 음주율, 비만율, 미충족의료 경험률)에서 인구집단 특성별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집단의 특성으로는 성·연령대뿐 아니라 지역, 소득수준이 제안되었다.

또한, 해당 지표와 함께 제시되어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지표 또는 추가 지표가 제안되었다. 건강수준 영역에서는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 지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또한, 자살률 지표는 자살생각률을 함께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우울감 경험률은 측정 방법에 대한 의견과 우울증상 유병률도 함께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표의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자살생각률과 우울증상 유병률에 대한 지표를 추가 구성하고, 기존 지표인 자살률 및 우울감 경험률과 함께 정신건강 영역을 신설하여 포함하였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영역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제시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도 함께 제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포함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은 외래서비스와 입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연평균 외래 진료 횟수 및 재원 일수로 정의하였다.

그 밖에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

해서는 건강검진 수검률,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이용률, 소요시간 등)이 있었으며, 지역별 의료 격차, 인력 및 병상 등 자원과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관련 지표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보험 지출 비중, 비급여 진료 현황 등이 있었으며, 장기요양보험 관련 지표(재정 규모, 보장률, 비용 부담, 충족률 등)에 대한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대상 필요도 평가 결과와 수집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한 보건의료 분야 동향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표 2-15〉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단위: 점)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10대 사망원인	★	신규 신규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상 유병률 자살생각률 자살률	★ ★	보완 신규
건강행태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미충족의료 경험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	신규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소득과 주거 분야

1. 전문가 조사 결과

가. 가계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과 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2%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총 98.1%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언론인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2.3%로 학계 전문가 66.2%, 정책결정자 6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이 지표가 사회보장 동향을 점검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6〉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9	1.5	0.0	3.8	0.0	2.6	0.0
③필요하다	37.9	32.3	33.3	53.8	44.4	36.4	37.5
④매우 필요하다	60.2	66.2	66.7	42.3	55.6	61.0	62.5
불필요(1+2)	1.9	1.5	0.0	3.8	0.0	2.6	0.0
필요(3+4)	98.1	98.5	100.0	96.2	100.0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과 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사회정책 동향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계 전문가나 언론인 집단에 비해 정책결정자 집단에서 이 지표가 사회정책 동향을 관리하기에 매우 필요한 지표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치중된 지출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관식 의견이 있었다.

〈표 2-17〉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③필요하다	49.5	49.2	33.3	57.7	66.7	48.1	25.0
④매우 필요하다	50.5	50.8	66.7	42.3	33.3	51.9	75.0
불필요(1+2)	0.0	0.0	0.0	0.0	0.0	0.0	0.0
필요(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 및 구성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0.8%,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6.3%로 전체 응답자의 97.1%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학계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언론인 모두 고르게 이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더불어 자산의 소유자와 실질적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표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부동산 가격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요소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3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표 2-18〉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2.9	3.1	0.0	3.8	5.6	2.6	0.0
③필요하다	56.3	55.4	58.3	57.7	77.8	50.6	62.5
④매우 필요하다	40.8	41.5	41.7	38.5	16.7	46.8	37.5
불필요(1+2)	2.9	3.1	0.0	3.8	5.6	2.6	0.0
필요(3+4)	97.1	96.9	100.0	96.2	94.4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과 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1%를 제외한 99.0%가 해당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가계 유동성을 우려하여 급격한 변동을 추적할 필요를 제안하였다.

〈표 2-19〉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③필요하다	48.5	47.7	41.7	53.8	77.8	41.6	50.0
④매우 필요하다	50.5	50.8	58.3	46.2	22.2	57.1	50.0
불필요(1+2)	1.0	1.5	0.0	0.0	0.0	1.3	0.0
필요(3+4)	99.0	98.5	100.0	100.0	100.0	98.7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나. 소득분배

소득분배 지표 중 상대 빈곤율과 지니계수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 97.1%의 응답자가 해당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학계 전문가 중에서 이 지표가 사회정책 성과와 동향을 관리하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1.5%로 5명 중 4명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0〉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2.9	1.5	0.0	7.7	5.6	2.6	0.0
③필요하다	31.1	16.9	58.3	53.8	27.8	29.9	50.0
④매우 필요하다	66.0	81.5	41.7	38.5	66.7	67.5	50.0
불필요(1+2)	2.9	1.5	0.0	7.7	5.6	2.6	0.0
필요(3+4)	97.1	98.5	100.0	92.3	94.4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연령집단별 빈곤율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8.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98.1%의 응답자가 이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학계 전문가 중 75.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8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표 2-21〉 연령집단별 빈곤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9	0.0	8.3	3.8	0.0	2.6	0.0
③필요하다	29.1	24.6	33.3	38.5	33.3	26.0	50.0
④매우 필요하다	68.9	75.4	58.3	57.7	66.7	71.4	50.0
불필요(1+2)	1.9	0.0	8.3	3.8	0.0	2.6	0.0
필요(3+4)	98.1	100.0	91.7	96.2	100.0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가구 유형별 빈곤율 지표에 대해서는 63.1%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3.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이지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6.1%로 매우 높다. 특히 학계 전문가와 언론인 중 이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내외로 높은 편이다. 가구 유형을 더 정교하게 구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22〉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0.0	0.0	7.7	0.0	1.3	12.5
②필요하지 않다	1.9	1.5	0.0	3.8	0.0	2.6	0.0
③필요하다	33.0	33.8	50.0	23.1	38.9	29.9	50.0
④매우 필요하다	63.1	64.6	50.0	65.4	61.1	66.2	37.5
불필요(1+2)	3.9	1.5	0.0	11.5	0.0	3.9	12.5
필요(3+4)	96.1	98.5	100.0	88.5	100.0	96.1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 경제활동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였다. 첫 번째는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근로자 지표, 두 번째는 구직 취약계층 지표다.

우선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근로자 지표와 관련하여 99%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54.4%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에 따른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연구기관 종사자와 언론 종사자는 모두 이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 속한 전문가 중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도 있었다. 전문가의 전공에 따른 의견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2-23〉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0	0.0	8.3	0.0	0.0	1.3	0.0
③필요하다	44.7	43.1	50.0	46.2	66.7	39.0	50.0
④매우 필요하다	54.4	56.9	41.7	53.8	33.3	59.7	50.0
불필요(1+2)	1.0	0.0	8.3	0.0	0.0	1.3	0.0
필요(3+4)	99.0	100.0	91.7	100.0	100.0	98.7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구직 취약계층 지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이 지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0.3%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9.7%였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 속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약 25%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학교/연구기관과 언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7.7%로 집계되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로 분야 전문가 중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94.4%로 사회과학 분야(88.3%)보다 조금 높았다.

〈표 2-24〉 구직 취약계층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로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9.7	7.7	25.0	7.7	5.6	11.7	0.0
③필요하다	44.7	44.6	50.0	42.3	61.1	39.0	62.5
④매우 필요하다	45.6	47.7	25.0	50.0	33.3	49.4	37.5
불필요(1+2)	9.7	7.7	25.0	7.7	5.6	11.7	0.0
필요(3+4)	90.3	92.3	75.0	92.3	94.4	88.3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전문가 조사 결과, 향후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활동 관련 지표로는 일자리 현황, 고용의 질,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지표가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근로자 지표와 구직 취약계층 지표에서 청년 세대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라. 정책 수요 및 공급

기준중위소득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10.7%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속기관별 응답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필요하다고(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응답했다. 이와 반대로 학교 및 연구기관은 응답자 중 89.2% 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언론 소속 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4%로, 사회과학 분야의 필요 응답 비율(8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가 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이므로 핵심 지표보다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25〉 기준중위소득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0.7	10.8	0.0	15.4	5.6	13.0	0.0
③필요하다	44.7	36.9	75.0	50.0	55.6	41.6	50.0
④매우 필요하다	44.7	52.3	25.0	34.6	38.9	45.5	50.0
불필요(1+2)	10.7	10.8	0.0	15.4	5.6	13.0	0.0
필요(3+4)	89.3	89.2	100.0	84.6	94.4	87.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주요 소득보장 수급률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낮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0%,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나타나 지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필요도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학교 및 연구기관이 96.9%, 언론이 96.2%로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보다는 낮지만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기타 전공과 보건의료 전공의 응답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회과학 전공의 응답자는 다른 전공에 비해 낮지만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주요 소득보장 수급률 지표와 관련해서 향후 급여의 충분성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지표가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별 수급률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2-26〉 주요 소득보장 수급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2.9	3.1	0.0	3.8	0.0	3.9	0.0
③필요하다	35.0	36.9	41.7	26.9	55.6	29.9	37.5
④매우 필요하다	62.1	60.0	58.3	69.2	44.4	66.2	62.5
불필요(1+2)	2.9	3.1	0.0	3.8	0.0	3.9	0.0
필요(3+4)	97.1	96.9	100.0	96.2	100.0	96.1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지표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필요도(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가 92.2%로, 응답자 대부분이 필요하고 응답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매우 필요하다가 56.9%, 필요하다가 36.9%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6.2%로 세 소속기관

중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가 8.3%로 학교 및 연구기관보다 다소 높지만, 필요도가 91.7%로 전반적으로는 지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가 11.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소속의 응답자에 비해 해당 지표에 대한 필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기타 전공의 응답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건의로 전공의 응답자도 9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사회과학 전공 응답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는 민간연금과 함께 모든 공적연금별 소득대체율에 대해 세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27〉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7.8	6.2	8.3	11.5	5.6	9.1	0.0
③필요하다	42.7	36.9	58.3	50.0	61.1	37.7	50.0
④매우 필요하다	49.5	56.9	33.3	38.5	33.3	53.2	50.0
불필요(1+2)	7.8	6.2	8.3	11.5	5.6	9.1	0.0
필요(3+4)	92.2	93.8	91.7	88.5	94.4	90.9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마. 주거

주거 분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8.5%,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3.7%로 전체 응답자의 92.2%가 이 지표의

4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해당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면, 정책 결정자 집단의 응답률이 1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6.7%로 높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주택의 경우 사적 자산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여 사회정책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과 함께 주거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취약한 주거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구 단위가 아닌 주거 공간 자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2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0.0	8.3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6.8	6.2	8.3	7.7	0.0	9.1	0.0
③필요하다	43.7	35.4	66.7	53.8	66.7	37.7	50.0
④매우 필요하다	48.5	58.5	16.7	38.5	33.3	51.9	50.0
불필요(1+2)	7.8	6.2	16.7	7.7	0.0	10.4	0.0
필요(3+4)	92.2	93.8	83.3	92.3	100.0	89.6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지표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1.7%,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0.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2.2%로 높다. 학계 전문가 중 10.8%, 정책결정자 중 8.3%가 해당 지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전히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월 소득이 개인 혹은 가구

마다 다를 수 있고,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을 통해 주거 환경의 사회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29〉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7.8	10.8	8.3	0.0	22.2	3.9	12.5
③필요하다	50.5	43.1	75.0	57.7	55.6	49.4	50.0
④매우 필요하다	41.7	46.2	16.7	42.3	22.2	46.8	37.5
불필요(1+2)	7.8	10.8	8.3	0.0	22.2	3.9	12.5
필요(3+4)	92.2	89.2	91.7	100.0	77.8	96.1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제시된 지표 이외에 보유 부동산 현황, 공공임대 주택 비율, 월세가구 비율, 전월세 대출금 이자 부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었다. 또한 거주 주택의 질적 환경에 따른 주거 취약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소득과 주거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다음 표는 소득과 주거 분야 세부 영역별 측정지표의 필요도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종합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지표와 가계 소득,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근로빈곤층과 저임금근로자, 가계 지출과 부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지표의 필요도가 80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과 가계 자산,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구직 취약계층과 기준중위소득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70점 후반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2-30〉 소득과 주거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단위: 점)

세부 영역	측정지표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 의료 분야	사회 과학 분야	기타
가계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86.1	88.2	88.9	79.5	85.2	86.1	87.5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83.5	83.6	88.9	80.8	77.8	84.0	91.7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79.3	79.5	80.6	78.2	70.4	81.4	79.2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83.2	83.1	86.1	82.1	74.1	85.3	83.3
소득 분배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87.7	93.3	80.6	76.9	87.0	88.3	83.3
	연령집단별 빈곤율	89.0	91.8	83.3	84.6	88.9	89.6	83.3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	85.8	87.7	83.3	82.1	87.0	87.0	70.8
경제 활동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84.5	85.6	77.8	84.6	77.8	86.1	83.3
	구직 취약계층	78.6	80.0	66.7	80.8	75.9	79.2	79.2
정책 수요 및 공급	기준중위소득	78.0	80.5	75.0	73.1	77.8	77.5	83.3
	주요 소득보장제도 공급률	86.4	85.6	86.1	88.5	81.5	87.4	87.5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80.6	83.6	75.0	75.6	75.9	81.4	83.3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79.9	84.1	63.9	76.9	77.8	80.1	83.3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78.0	78.5	69.4	80.8	66.7	81.0	75.0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매우 필요하다(4점)”의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가계 영역에서 소득 수준과 구성을 지표로 모니터링할 필요도는 86.1점으로 이 영역 4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상황을

소득으로 보는 접근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산은 상대적으로 필요도 점수가 낮은 편이었지만, 부동산 및 거주주택 자산 요소를 구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주거 분야 지표의 대리지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 지표를 부가적으로 검토하여 가계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소득분배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빈곤율과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연령집단별 빈곤율의 필요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세대의 생애를 아우르는 소득분배 동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의 필요도는 동일 영역에서는 낮게 보이지만, 다른 영역의 지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장애인, 한부모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성과 및 동향 분석의 보조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필요도가 높은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근로자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구직 취약계층을 측정하는 지표의 필요도에 비해 이 지표의 필요도가 높은 것은 소득과 주거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소득과 주거 분야 정책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는 정책 기준선으로서의 기준중위소득과 정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비해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필요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지 않지만, 다층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거 영역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의 필요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대표지표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8.5%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의 4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48 사회복지 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표 2-31〉 소득과 주거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단위: 점)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가계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가계 총자산/순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 ★	보완
소득분배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연령집단별 빈곤율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	★ ★ ★	
경제활동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구직 취약계층	★	
정책 수요 및 공급	기준중위소득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	

자료: 연구진 작성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1. 전문가 조사 결과

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대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에서 35.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2.4%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영역의 모호성과

사회서비스 욕구가 제한될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회서비스 범주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모수인 사회서비스 필요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이용자 집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32〉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2.6	10.8	16.7	15.4	5.6	15.6	0.0
③필요하다	52.4	47.7	58.3	61.5	72.2	45.5	75.0
④매우 필요하다	35.0	41.5	25.0	23.1	22.2	39.0	25.0
불필요(1+2)	12.6	10.8	16.7	15.4	5.6	15.6	0.0
필요(3+4)	87.4	89.2	83.3	84.6	94.4	84.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2.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 93.2%의 응답자가 이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언론인 중 61.5%가 이 지표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재학대 발생률과 학대 가해자 유형과 발생 장소, 학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지표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2-33〉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6.8	7.7	8.3	3.8	0.0	9.1	0.0
③필요하다	50.5	53.8	66.7	34.6	77.8	45.5	37.5
④매우 필요하다	42.7	38.5	25.0	61.5	22.2	45.5	62.5
불필요(1+2)	6.8	7.7	8.3	3.8	0.0	9.1	0.0
필요(3+4)	93.2	92.3	91.7	96.2	100.0	90.9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8.2%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86.4%가 이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표가 활동에 제약을 경험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표라기보다 공급자 중심의 지표라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 출현 이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심의 지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2-34〉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12.6	13.8	8.3	11.5	22.2	11.7	0.0
③필요하다	58.3	55.4	66.7	61.5	66.7	55.8	62.5
④매우 필요하다	28.2	29.2	25.0	26.9	11.1	31.2	37.5
불필요(1+2)	13.6	15.4	8.3	11.5	22.2	13.0	0.0
필요(3+4)	86.4	84.6	91.7	88.5	77.8	87.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었다.

〈표 2-35〉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9	1.5	0.0	3.8	0.0	2.6	0.0
③필요하다	51.5	50.8	50.0	53.8	61.1	49.4	50.0
④매우 필요하다	46.6	47.7	50.0	42.3	38.9	48.1	50.0
불필요(1+2)	1.9	1.5	0.0	3.8	0.0	2.6	0.0
필요(3+4)	98.1	98.5	100.0	96.2	100.0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57.3%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급여유형별 이용률, 노인 연령대별 수급자 세분화,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필요성 및 충분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었다.

〈표 2-36〉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3.9	3.1	0.0	7.7	0.0	5.2	0.0
③필요하다	38.8	41.5	41.7	30.8	66.7	32.5	37.5

5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④매우 필요하다	57.3	55.4	58.3	61.5	33.3	62.3	62.5
불필요(1+2)	3.9	3.1	0.0	7.7	0.0	5.2	0.0
필요(3+4)	96.1	96.9	100.0	92.3	100.0	94.8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 밖에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율, 장애 유형별 사회서비스 요구도, 돌봄서비스 성과 측정 지표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었다.

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성과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8.2%,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9.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77.7% 수준이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22.3%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업체, 종사자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공급의 관점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질적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분담 수준을 파악할 필요성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었다.

〈표 2-37〉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0.0	0.0	3.8	0.0	0.0	12.5
②필요하지 않다	21.4	23.1	25.0	15.4	22.2	22.1	12.5
③필요하다	49.5	46.2	50.0	57.7	61.1	48.1	37.5
④매우 필요하다	28.2	30.8	25.0	23.1	16.7	29.9	37.5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불필요(1+2)	22.3	23.1	25.0	19.2	22.2	22.1	25.0
필요(3+4)	77.7	76.9	75.0	80.8	77.8	77.9	75.0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아래 수치로 인하여 산술 합계가 100이 아닐 수 있음.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4.5%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 정도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책결정자 집단에서 해당 응답률이 25.0%로 비교적 높다.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의 질과 근로환경, 종사자의 자발적 진입 여부와 이직 고려 여부 등에 관한 지표를 보완할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시장 현황 자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38〉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1.5	0.0	3.8	0.0	1.3	12.5
②필요하지 않다	13.6	10.8	25.0	15.4	16.7	13.0	12.5
③필요하다	43.7	46.2	25.0	46.2	55.6	42.9	25.0
④매우 필요하다	40.8	41.5	50.0	34.6	27.8	42.9	50.0
불필요(1+2)	15.5	12.3	25.0	19.2	16.7	14.3	25.0
필요(3+4)	84.5	87.7	75.0	80.8	83.3	85.7	75.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 밖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공급 주체 특성별 사업체 현황, 공공성 정도, 사회서비스 접근성,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률 등에 대한 추가 지표 의견이 있었다.

2.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들

사회서비스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종합한 결과,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에 대한 필요도가 84.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이 81.6점,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이 78.6점,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가 74.4점,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이 74.1점으로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출현율 자체가 낮은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과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지표에 대한 필요도가 각각 71.2점과 68.3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2-39〉 사회서비스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단위: 점)

세부 영역	측정지표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 의료 분야	사회 과학 분야	기타
사회 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74.1	76.9	69.4	69.2	72.2	74.5	75.0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78.6	76.9	72.2	85.9	74.1	78.8	87.5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71.2	70.8	72.2	71.8	63.0	72.3	79.2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81.6	82.1	83.3	79.5	79.6	81.8	83.3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84.5	84.1	86.1	84.6	77.8	85.7	87.5
사회 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68.3	69.2	66.7	66.7	64.8	69.3	66.7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74.4	75.9	75.0	70.5	70.4	75.8	70.8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매우 필요하다(4점)”의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사회서비스 분야의 세부 영역별 대표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의 대상별로 필요도 응답이 높거나 신규로 제안된 지표를 채택하였다.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노인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을, 아동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대표지표로 하였다. 단, 각 지표를 대표지표로 쓰더라도 단일 지표로 대상별 정책 성과를 종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지표도 의미 있지만, 노동시장 성과 지표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고용의 질이나 근로환경 등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향후 지표를 점진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표 2-40〉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단위: 점)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사회 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신규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	
사회 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	

자료: 연구진 작성

제5절 인구 분야

1. 전문가 조사 결과

가. 인구(정태·동태)

정태적 인구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적절한 지표로서 주요 집단별 인구 규모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인구 규모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1%로 과반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0%로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 중 3명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 전문가의 97.1%는 인구 규모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인구 규모를 파악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노인인구의 경우는 80세 이상 비율을 포함해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인구 규모 지표는 인구 분야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며, 이를 위해 인구 집단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집단별 인구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2-41〉 (정태) 인구 규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2.9	4.6	0.0	0.0	5.6	2.6	0.0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③필요하다	34.0	33.8	33.3	34.6	16.7	36.4	50.0
④매우 필요하다	63.1	61.5	66.7	65.4	77.8	61.0	50.0
불필요(1+2)	2.9	4.6	0.0	0.0	5.6	2.6	0.0
필요(3+4)	97.1	95.4	100.0	100.0	94.4	97.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정태적 인구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된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연령에 따른 인구 구조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이다. 부양비 지표의 필요성은 사회 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부양비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1%로 과반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0%로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 중 3명의 전문가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전체 전문가의 97.1%는 부양비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지표의 개선을 위해 노인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것과 노인 연령 재정립에 따른 구간별 부양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부양비 지표는 인구 분야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며 노인 부양비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 집단을 더 세분화하고 변화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표 2-42〉 (정태) 부양비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2.9	4.6	0.0	0.0	0.0	3.9	0.0
③필요하다	33.0	30.8	50.0	30.8	27.8	35.1	25.0
④매우 필요하다	64.1	64.6	50.0	69.2	72.2	61.0	75.0
불필요(1+2)	2.9	4.6	0.0	0.0	0.0	3.9	0.0
필요(3+4)	97.1	95.4	100.0	100.0	100.0	96.1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동태적 인구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된 인구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지역 인구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이다. 인구이동률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나타났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전문가(89.3%)가 인구이동률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단순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인구이동률 지표는 인구 분야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며 현재 지자체에 따라 보고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국가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2-43〉 (동태) 인구이동을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0.7	6.2	0.0	26.9	11.1	11.7	0.0
③필요하다	59.2	61.5	66.7	50.0	61.1	57.1	75.0
④매우 필요하다	30.1	32.3	33.3	23.1	27.8	31.2	25.0
불필요(1+2)	10.7	6.2	0.0	26.9	11.1	11.7	0.0
필요(3+4)	89.3	93.8	100.0	73.1	88.9	88.3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동태적 인구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된 지역별 인구 전출입 규모는 인구이동률과 함께 지역의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이다. 지역별 인구 전출입 규모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로 나타났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5%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고 1.0%의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전문가(88.3%)가 지역별 인구 전출입 규모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전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취업 상태별, 학력별 전출입 규모를 산출할 것이 제안되었다. 종합할 때, 지역별 인구 전출입 규모 지표는 인구 분야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며 가능한 한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4〉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0.0	0.0	3.8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10.7	13.8	0.0	7.7	11.1	11.7	0.0
③필요하다	48.5	40.0	66.7	61.5	55.6	45.5	62.5
④매우 필요하다	39.8	46.2	33.3	26.9	33.3	41.6	37.5
불필요(1+2)	11.7	13.8	0.0	11.5	11.1	13.0	0.0
필요(3+4)	88.3	86.2	100.0	88.5	88.9	87.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나. 가구

인구 분야 가구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된 1인가구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구 유형의 하나이다. 1인가구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로 과반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으며 1.0%의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97.1%)가 1인가구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성별 및 연령별로 조합한 1인가구 지표, 지역별 1인가구 지표, 특정 기간별 1인가구 지표, 고령자 1인가구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1인가구 지표는 인구 분야 가구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며 가능한 한 다양한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5〉 1인가구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1.9	3.1	0.0	0.0	0.0	2.6	0.0
③필요하다	35.0	35.4	58.3	23.1	22.2	36.4	50.0
④매우 필요하다	62.1	60.0	41.7	76.9	77.8	59.7	50.0
불필요(1+2)	2.9	4.6	0.0	0.0	0.0	3.9	0.0
필요(3+4)	97.1	95.4	100.0	100.0	100.0	96.1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인구 분야 가구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된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은 사회정책의 정책 개입 단위의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표이다. 일반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거의 절반 수준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94.2%)가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사실혼 관계의 새로운 가구 유형을 반영하고 OECD Family database의 가구 유형 지표를 고려하는 지표가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는 인구 분야 가구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며 다양한 가구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6〉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로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5.8	7.7	0.0	3.8	0.0	7.8	0.0
③필요하다	44.7	43.1	58.3	42.3	44.4	42.9	62.5
④매우 필요하다	49.5	49.2	41.7	53.8	55.6	49.4	37.5
불필요(1+2)	5.8	7.7	0.0	3.8	0.0	7.8	0.0
필요(3+4)	94.2	92.3	100.0	96.2	100.0	92.2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 혼인·출산

인구 분야 혼인·출산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된 합계출산율은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대표지표로, 가임 연령(15~49세)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0%로 과반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의 모든(99.0%) 전문가가 합계출산율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조출생률 지표가 제안되었고 결혼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을 추가로 산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합계출산율 지표는 인구 분야 혼인·출산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다.

〈표 2-47〉 합계출산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0	0.0	0.0	3.8	0.0	1.3	0.0
③필요하다	32.0	27.7	58.3	30.8	27.8	33.8	25.0
④매우 필요하다	67.0	72.3	41.7	65.4	72.2	64.9	75.0
불필요(1+2)	1.0	0.0	0.0	3.8	0.0	1.3	0.0
필요(3+4)	99.0	100.0	100.0	96.2	100.0	98.7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인구 분야 혼인·출산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결혼 이민자 비율은 전체 체류 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남녀의 백분비를 의미한다.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로 다른 인구 분야 지표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로 나타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대다수(88.3%)의 전문가가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가 출산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이주노동자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 체류 중인 외국인 비율과 귀화인 규모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비율은 출산보다는 혼인의 측면에서 인구 변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그 자체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분류를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는 인구 분야 혼인·출산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다.

〈표 2-48〉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1.7	15.4	0.0	7.7	0.0	15.6	0.0
③필요하다	49.5	50.8	58.3	42.3	55.6	48.1	50.0
④매우 필요하다	38.8	33.8	41.7	50.0	44.4	36.4	50.0
불필요(1+2)	11.7	15.4	0.0	7.7	0.0	15.6	0.0
필요(3+4)	88.3	84.6	100.0	92.3	100.0	84.4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라. 돌봄·양육

인구 분야 돌봄·양육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성별 가사노동시간은 19세 이상(2014년까지 20세 이상) 기혼 남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에 사용한 시간을 의미한다.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5%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나타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나 대부분(92.2%)의 전문가가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 의견으로 근로형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고 연령대별 성별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원인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하고 연령별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를 제시할 때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시간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표명으로 성별 가사노동시간보다는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합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는 인구 분야 돌봄·양육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능한 수준에서 더 세분화하여 자세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다.

〈표 2-49〉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0.0	0.0	7.7	0.0	1.3	12.5
②필요하지 않다	5.8	4.6	8.3	7.7	11.1	3.9	12.5
③필요하다	51.5	47.7	75.0	50.0	55.6	50.6	50.0
④매우 필요하다	40.8	47.7	16.7	34.6	33.3	44.2	25.0
불필요(1+2)	7.8	4.6	8.3	15.4	11.1	5.2	25.0
필요(3+4)	92.2	95.4	91.7	84.6	88.9	94.8	75.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인구 분야 돌봄·양육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성별 육아휴직자 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로 정의된다.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

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로 과반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나타나, 거의 모든(98.1%) 전문가가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추가로 육아휴직 이용기간, 출생아 대비 육아휴직자 수의 비율, 육아휴직 후 복귀자 수 등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는 인구 분야 돌봄·양육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설명력이 있는 보조 지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다.

〈표 2-50〉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9	1.5	8.3	0.0	5.6	1.3	0.0
③필요하다	39.8	36.9	50.0	42.3	61.1	33.8	50.0
④매우 필요하다	58.3	61.5	41.7	57.7	33.3	64.9	50.0
불필요(1+2)	1.9	1.5	8.3	0.0	5.6	1.3	0.0
필요(3+4)	98.1	98.5	91.7	100.0	94.4	98.7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2. 인구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인구 분야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존의 인구 지표는 모두 전체 전문가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고, 필요도가 70점 이상으로 높게평가되었다. 또한 지역별 전출입 규모 지표, 1인가구 지표,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안된 모든 인구 지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표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구 분야 지표 중에서 가장 적은 동의를 얻은 필요성이 가장 낮은 지표는 인구이동률 지표와 지역별 전출입 규모 지표이며, 필요도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인구이동률 지표, 지역별 전출입 규모 지표,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이다. 세부 영역별 비중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 비율 지표와 지역별 전출입 지표는 향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 전출입 규모 지표는 별도로 산출하기보다는 인구이동률 지표에 추가로 전입신고 건수나 권역별 순이동자 수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안된 지표를 산출할 때는 더 상세하게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추가 지표들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 규모 지표는 전체 인구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규모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양비 지표는 전체 부양비뿐만 아니라 유소년 부양비와 노인 부양비를 구분해서 제시하되 특히 노인 부양비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 집단을 더 세분화하고 변화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반영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추어 연령을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이동률 지표는 향후 생활인구를 데이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인구 전출입 규모 지표는 취업 상태나 학력 등과 같은 전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지표는 전체 1인가구만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1인가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는 다양한 가구 유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 분야 동향 분석 지표로 제안된 모든 지표는 향후에도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이고 더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51〉 인구 분야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단위: 점)

세부 영역	측정지표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 의료 분야	사회 과학 분야	기타
인구	(정태) 인구 규모	86.7	85.6	88.9	88.5	90.7	86.1	83.3
	(정태) 부양비	87.1	86.7	83.3	89.7	90.7	85.7	91.7
	(동태) 인구이동률	73.1	75.4	77.8	65.4	72.2	73.2	75.0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	75.7	77.4	77.8	70.5	74.1	75.8	79.2
가구	1인가구	86.1	84.6	80.6	92.3	92.6	84.8	83.3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81.2	80.5	80.6	83.3	85.2	80.5	79.2
혼인·출산	합계출산율	88.7	90.8	80.6	87.2	90.7	87.9	91.7
	결혼이민자 비율	75.7	72.8	80.6	80.8	81.5	73.6	83.3
돌봄·양육	성별 가사노동시간	77.0	81.0	69.4	70.5	74.1	79.2	62.5
	성별 육아휴직자 수	85.4	86.7	77.8	85.9	75.9	87.9	83.3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매우 필요하다(4점)”의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인구 분야 4개 영역의 대표지표는 필요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종합 하되 전문가의 필요도 평가 점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인구(정태·동태) 분야에서는 인구 규모와 부양비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고, 가구 분야에서는 1인가구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혼인·출산 분야에서는 합계출산율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였고, 돌봄·양육 분야에서는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인구 분야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개선한 측정지표로, 다수의 전문가가 제안한 조출생률과 조혼인율 지표가 있다. 이에 따라 조출생률과 조혼인율 지표는 혼인·출산 영역에서 향후에도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인구 분야 동향 분석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지표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개선해야 할 측정 지표로 한 번씩 언급된 지표로는 출산지원 총액, 비친족가구 구성 이주민 비율, 혼인연령, 지역이동률, 대체돌봄 가능 여부, 총연순이동률, 이주배경인구, 신혼부부의 혼인연차별 평균 자녀 수, 평균출생아 수, 혼외출산율, 다문화가족 빈곤율, 돌봄 미충족 비율, 성별 임금격차, 이혼율, 난임치료 관련 지표, 귀화자 및 이민자의 규모 및 분포, 인구 수도권 집중 비율이 있다.

〈표 2-52〉 인구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단위: 점)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인구	(정태) 인구 규모	★	삭제
	(정태) 부양비	★	
	(동태) 인구가동률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		
가구	1인가구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혼인·출산	합계출산율 결혼이민자 비율 조출생률 조혼인율	★	삭제 신규 신규
돌봄·양육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휴직자 수	★	

자료: 연구진 작성

제6절 사회보장 일반

1. 전문가 조사 결과

가. 행복삶의 질

행복 지표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4.7%,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0.8%로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85.4%로 나타났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도 14.6% 존재한다. 특히 학계 전문가 중 이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5%로 높고, 언론인이 26.9%이며, 정책 결정자는 8.3%에 불과하다. 보완 의견으로 국제비교 시 주관적 인식을 질문하는 지표가 가지는 비교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표 2-53〉 행복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0.0	8.3	3.8	0.0	1.3	12.5
②필요하지 않다	12.6	10.8	25.0	11.5	5.6	15.6	0.0
③필요하다	40.8	30.8	58.3	57.7	44.4	37.7	62.5
④매우 필요하다	44.7	58.5	8.3	26.9	50.0	45.5	25.0
불필요(1+2)	14.6	10.8	33.3	15.4	5.6	16.9	12.5
필요(3+4)	85.4	89.2	66.7	84.6	94.4	83.1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7.3%,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7.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95.1%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계 전문가 중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높다. 그러나 삶의 질 척도 또한 국제비교 시 지표값의 상대적 지위 이외에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료의 이용 가능성 제약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었다.

〈표 2-54〉 삶의 질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0.0	0.0	3.8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3.9	1.5	25.0	0.0	0.0	3.9	12.5
③필요하다	37.9	32.3	41.7	50.0	33.3	37.7	50.0
④매우 필요하다	57.3	66.2	33.3	46.2	66.7	57.1	37.5

7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불필요(1+2)	4.9	1.5	25.0	3.8	0.0	5.2	12.5
필요(3+4)	95.1	98.5	75.0	96.2	100.0	94.8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사회적 고립 지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9.2%,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5.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지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95.1%로 높다. 특히 학계 전문가 중 이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보완 의견으로 사회적 고립의 대응 지표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를 제안하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 경향과 영향 추적, 청년이나 중장년, 노인 등 연령 집단별 고립과 은둔에 대한 분석, 고립과 은둔의 자발적 선택과 비자발적 유지 경향 등에 대한 추가 지표 설정과 분석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표 2-55〉 사회적 고립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1.5	0.0	3.8	0.0	2.6	0.0
②필요하지 않다	2.9	1.5	16.7	0.0	0.0	2.6	12.5
③필요하다	35.9	30.8	58.3	38.5	27.8	36.4	50.0
④매우 필요하다	59.2	66.2	25.0	57.7	72.2	58.4	37.5
불필요(1+2)	4.9	3.1	16.7	3.8	0.0	5.2	12.5
필요(3+4)	95.1	96.9	83.3	96.2	100.0	94.8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나. 사회인식

전문가 조사 결과, 갈등 및 차별 인식 지표, 사회적 자본 지표,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지표 등 사회 인식에 관한 세 가지 지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갈등 및 차별 인식 지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언론기관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96.2%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은 9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의 전공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와 사회과학 전공자들은 각각 100%와 93.5%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기타 전공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87.5%로 조금 낮았다.

〈표 2-56〉 갈등 및 차별 인식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5.8	6.2	8.3	3.8	0.0	6.5	12.5
③필요하다	48.5	46.2	75.0	42.3	66.7	42.9	62.5
④매우 필요하다	45.6	47.7	16.7	53.8	33.3	50.6	25.0
불필요(1+2)	5.8	6.2	8.3	3.8	0.0	6.5	12.5
필요(3+4)	94.2	93.8	91.7	96.2	100.0	93.5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사회적 자본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은 91.3%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와 언론인은 각각 50.8%와 42.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소속 전문가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3%에 그쳤다. 전문가의 전공에 따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전공자들 가운데 10.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여 다른 전공자들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57〉 사회적 자본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8.7	9.2	8.3	7.7	5.6	10.4	0.0
③필요하다	47.6	40.0	83.3	50.0	50.0	44.2	75.0
④매우 필요하다	43.7	50.8	8.3	42.3	44.4	45.5	25.0
불필요(1+2)	8.7	9.2	8.3	7.7	5.6	10.4	0.0
필요(3+4)	91.3	90.8	91.7	92.3	94.4	89.6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지표의 필요성은 87.4%로 나타나 앞의 두 지표와 비교하면 조금 낮았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학교/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의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83.1%로 가장 낮았고,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소속 전문가는 100%로 가장 높았다. 전공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전공자 가운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77.8%에 그쳐 다른 전공자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표 2-58〉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2.6	16.9	0.0	7.7	22.2	11.7	0.0
③필요하다	42.7	43.1	66.7	30.8	44.4	40.3	62.5
④매우 필요하다	44.7	40.0	33.3	61.5	33.3	48.1	37.5
불필요(1+2)	12.6	16.9	0.0	7.7	22.2	11.7	0.0
필요(3+4)	87.4	83.1	100.0	92.3	77.8	88.3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위 세 가지 지표 외에 사회 인식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 사회보장재정

총사회지출 지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8.3%,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1.7%로 나타났다. 이 지표의 필요성에 모든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중심으로 보면, 학계 전문가가 64.6%, 정책결정자 집단이 50.0%, 언론인이 46.2% 순으로 나타난다. 국제비교 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비교할 필요성과 정부 지출과 구별할 필요성, 사회지출 및 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7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표 2-59〉 총사회지출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③필요하다	41.7	35.4	50.0	53.8	55.6	36.4	62.5
④매우 필요하다	58.3	64.6	50.0	46.2	44.4	63.6	37.5
불필요(1+2)	0.0	0.0	0.0	0.0	0.0	0.0	0.0
필요(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분야별 사회지출 지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6.3%,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3.7%로 나타났다. 총사회지출과 함께 이 지표의 필요성에 모든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회지출의 개념과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었다.

〈표 2-60〉 분야별 사회지출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③필요하다	43.7	33.8	58.3	61.5	55.6	39.0	62.5
④매우 필요하다	56.3	66.2	41.7	38.5	44.4	61.0	37.5
불필요(1+2)	0.0	0.0	0.0	0.0	0.0	0.0	0.0
필요(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5.3%,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3.7%로 나타났다. 이 지표의 필요성에 99.0%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학계 전문가 중 이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고, 언론인이 50.0%, 정책결정자 집단이 41.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61〉 조세부담 및 국민부담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1.0	0.0	0.0	3.8	0.0	1.3	0.0
③필요하다	43.7	40.0	58.3	46.2	50.0	41.6	50.0
④매우 필요하다	55.3	60.0	41.7	50.0	50.0	57.1	50.0
불필요(1+2)	1.0	0.0	0.0	3.8	0.0	1.3	0.0
필요(3+4)	99.0	100.0	100.0	96.2	100.0	98.7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총사회복지지출 지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6.6%,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7.6%로 나타났다. 94.2%의 응답자가 이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언론인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0.0%로 학계 전문가 47.7%, 정책결정자 33.3%에 비해 다소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필요성과 함께 예산 분배 노력과 결산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2-62〉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5.8	6.2	0.0	7.7	11.1	5.2	0.0
③필요하다	47.6	46.2	66.7	42.3	50.0	44.2	75.0
④매우 필요하다	46.6	47.7	33.3	50.0	38.9	50.6	25.0
불필요(1+2)	5.8	6.2	0.0	7.7	11.1	5.2	0.0
필요(3+4)	94.2	93.8	100.0	92.3	88.9	94.8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라.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지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5.8%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다가 44.7%, 매우 필요하다가 49.5%이며, 전체 응답자 중 9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은 모든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언론 소속 응답자의 필요(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하다는 응답 비율이 96.2%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및 연구기관 소속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세 소속기관 중 가장 높지만, 필요도가 92.3%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전공 분야별로는 기타 전공은 필요도가 100%이며, 사회과학 전공도 필요도가 94.8%로 전체 응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불필요가 11.1%, 필요가 88.9%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였다.

〈표 2-63〉 경제성장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5.8	7.7	0.0	3.8	11.1	5.2	0.0
③필요하다	44.7	40.0	66.7	46.2	50.0	42.9	50.0
④매우 필요하다	49.5	52.3	33.3	50.0	38.9	51.9	50.0
불필요(1+2)	5.8	7.7	0.0	3.8	11.1	5.2	0.0
필요(3+4)	94.2	92.3	100.0	96.2	88.9	94.8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전체 응답자 중 물가상승률 지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96.1%이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이다.

소속기관 중에서는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소속 모두 필요도가 100%로 해당 소속 응답자 모두 물가상승률 지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및 연구기관의 경우 필요(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이 93.8%로 다른 두 소속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기타 전공의 응답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 응답자의 경우 5.2%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8%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거시지표와 함께 물가상승률 지표는 선행지표로, 핵심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로 주요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64〉 물기상승률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0.0	0.0
②필요하지 않다	3.9	6.2	0.0	0.0	0.0	5.2	0.0
③필요하다	38.8	33.8	58.3	42.3	44.4	39.0	25.0
④매우 필요하다	57.3	60.0	41.7	57.7	55.6	55.8	75.0
불필요(1+2)	3.9	6.2	0.0	0.0	0.0	5.2	0.0
필요(3+4)	96.1	93.8	100.0	100.0	100.0	94.8	100.0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기후변화 지표는 필요하다가 42.7%, 매우 필요하다가 38.8%로 총 81.6%의 필요도를 보였지만, 필요하지 않다 17.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로 불필요도가 18.4%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언론 소속 응답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학교 및 연구기관의 불필요도가 24.6%,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불필요도가 25.0%로 타 지표에 비해 불필요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학교 및 연구기관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5%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세 전공 모두 불필요의 비율이 10% 이상이었으며, 필요도가 8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기타 전공의 12.5%, 보건의료 분야의 16.7%, 사회과학 분야의 19.5%가 불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추가 의견으로 기후변화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거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지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 성과 및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65〉 기후변화 지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의료 분야	사회과학 분야	기타
응답자	(103)	(65)	(12)	(26)	(18)	(77)	(8)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5	0.0	0.0	0.0	1.3	0.0
②필요하지 않다	17.5	23.1	25.0	0.0	16.7	18.2	12.5
③필요하다	42.7	36.9	58.3	50.0	33.3	44.2	50.0
④매우 필요하다	38.8	38.5	16.7	50.0	50.0	36.4	37.5
불필요(1+2)	18.4	24.6	25.0	0.0	16.7	19.5	12.5
필요(3+4)	81.6	75.4	75.0	100.0	83.3	80.5	87.5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2. 사회보장 일반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사회보장 일반 분야의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를 종합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재정 분야 지표의 점수가 80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거시지표 중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필요도가 80점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필요도 종합 점수가 73.1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행복이 76.1점,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이 77.3점, 사회적 자본이 78.3점으로 다소 낮다.

〈표 2-66〉 사회보장 일반 동향 분석 지표의 필요도 종합

(단위: 점)

세부 영역	측정지표	전체	소속기관			전공		
			학교/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언론	보건 의료 분야	사회 과학 분야	기타
행복·삶의 질	행복	76.1	82.6	55.6	69.2	81.5	75.8	66.7
	삶의 질	83.8	88.2	69.4	79.5	88.9	83.5	75.0
	사회적 고립	84.1	87.2	69.4	83.3	90.7	83.5	75.0
사회 인식	갈등 및 차별 인식	79.9	80.5	69.4	83.3	77.8	81.4	70.8
	사회적 자본	78.3	80.5	66.7	78.2	79.6	78.4	75.0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77.3	74.4	77.8	84.6	70.4	78.8	79.2
사회 보장 재정	총사회지출	86.1	88.2	83.3	82.1	81.5	87.9	79.2
	분야별 사회지출	85.4	88.7	80.6	79.5	81.5	87.0	79.2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84.8	86.7	80.6	82.1	83.3	85.3	83.3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80.3	80.5	77.8	80.8	75.9	81.8	75.0
거시 지표	경제성장률	81.2	81.5	77.8	82.1	75.9	82.3	83.3
	물가상승률	84.5	84.6	80.6	85.9	85.2	83.5	91.7
	기후변화	73.1	70.8	63.9	83.3	77.8	71.9	75.0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매우 필요하다(4점)”의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이를 종합하여 사회보장 일반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과 삶의 질 영역에서는 사회적 고립 지표의 필요도가 8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표지표로 채택하였다. 삶의 질의 필요도 또한 83.8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자료원의 이용가능성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삶의 질 지표는 삭제하고, 행복을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리 지표로 하여 대표지표로 분류하였다.

사회 인식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보다 종합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갈등 및 차별 인식 지표를 대표지표로 채택하였다. 갈등과 차별 인식은 사회정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에

대응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사회보장재정에서는 종합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총사회지출과 분야별 사회지출을 대표지표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지출의 근간이 되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과 국내 지역별 총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거시지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종합 필요도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 물가상승률은 가계의 지출 부담과 실질적 처분가능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또한 사회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지표이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미래 사회적 위협으로, 이 지표를 사회정책 동향 지표에서 삭제하기보다 관리할 지표에 포함하였다.

〈표 2-67〉 사회보장 일반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단위: 점)

세부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대표지표	비고
행복·삶의 질	행복 삶의 질 사회적 고립	★ ★	삭제
사회인식	갈등 및 차별 인식 사회적 자본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사회보장 재정	총사회지출 분야별 사회지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 ★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후변화	★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DB 구축 방안

제1절 보건의료 분야

제2절 소득과 주거 분야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제4절 인구 분야

제5절 사회보장 일반

제 3 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DB 구축 방안

제1절 보건의료 분야

1. 건강수준

기대수명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를 통해 산출되고, 건강수명은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산출 방법과 자료원이 달라진다.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2년 단위로 발표하는 건강수명의 경우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으로 구분된다. 두 지표 모두 국민 대상 주관적 설문인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유병기간을 묻는 문항에서 장애 유병률을 산출해 적용하고,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에서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 응답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주민희, 오유미, 윤석준, 오인환, 201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국가의 건강수준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이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건강수명 지표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이므로 객관성 및 국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주민희 외, 2018).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이 용이하고 활용도 또한 높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구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사회조사 원자료에 접근하여 세부 분석을 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문항 결과를 통해 산출한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묻는 다른 국가 단위 조사도 있으나,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는 OECD 보건통계 중 ‘주관적 건강 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수집에 활용되어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조사에서 수집되는 다른 변수(성,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보고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의 유병률을 제공하고 있다. KOSIS 통계표에서는 성·연령·거주지역(동/읍면)·소득수준별 결과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제공받으면, 다른 변수에 따른 결과도 분석할 수 있다.

10대 사망원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4항목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성·연령(·지역)/성·혼인상태/성·교육 정도/성·직업별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

2. 정신건강

국가의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경우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자살생각률은 여러 조사를 통해 산출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 또는 노인 대상 조사와 같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 국민 대상 조사는 대표적으로 통계청 사회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두 조사 모두 KOSIS 통계표를 통해서 기초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구독 시 다른 변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우울감 경험률과 우울증상 유병률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로 산출하고, 우울증상 유병률은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통해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사람의 분율(%)로 산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특성상 지역 관련 변수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원시자료 구득이 가능하다.

3. 건강행태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자료원은 다양하나,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1년 단위로 생산된다는 점,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구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율(현재 흡연율, 매일 흡연율), 음주율(연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한다. KOSIS 통계표에서는 성·연령·거주지역(동/읍면)·소득 수준별 결과를 제공하고, 원자료 구득이 가능하다.

건강행태를 측정하는 지표의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므로 지표를 제시할 때는 조사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를 통해 매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보건통계에도 활용되어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이다.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자가기입 문항으로 KOSIS 통계표에서는 성·연령·소득수준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자료 구독 시 조사에서 수집된 변수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를 통해 발표된다. 기본적으로 요양기관 종별 결과와 소득수준별 결과가 발표되며, 연도에 따라 성·연령별 자료가 발표되기도 한다. 해당 자료는 별도의 통계표가 제공되지는 않고, 조사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어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은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OECD 보건통계에도 포함되는 주요 지표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통해 산출이 가능하나, 원자료에서 바로 수집되는 통계량이 아닌 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별도의 산출이 필요한 지표로 현재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https://www.khp.re.kr:444/>)에서 연도별 값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원자료를 구독하여 산출식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다.

〈표 3-1〉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국제비교	성·연령·지역
건강 수준	기대수명	생명표	통계청	1년	가능	국제비교	성·연령·지역
	유병기간 제외	생명표	통계청	2년	가능	-	성·연령·지역
	건강수명	생명표	통계청	2년	가능	-	성·연령·지역
	주관적 건강평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국제비교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정신 건강	주관적 건강지표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10대 사망원인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
	우울감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
정신 건강	우울증상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
	자살충동	사회조사	통계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소득·교육
	자살생각률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가능	-	성·연령·지역·소득·교육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가능	국제비교	성·연령·지역

(단위: 점)

세부 영역	개선했던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건강 행태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비만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가능	-	성·연령·지역(동/읍면)·소득수준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가능	국제비교	성·연령·요양기관종별
	미충족의료 경험률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가능	-	성·연령·소득수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가능	-	요양기관종별·소득수준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1년	가능	국제비교	-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가능	-	-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소득과 주거 분야

1. 가계와 소득분배

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국내의 공식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생산, 관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 1회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약 20,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본오차는 가중치를 통해 보정한다. 조사 시점 전년도에 연간 소득과 지출을, 조사시점 기준 자산과 부채를 조사한다. 면접조사를 주된 조사 방법으로 하며, 2018년부터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한 공적이전 및 공적지출에 대한 행정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조사 기준연도 12월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익년도 상반기에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한다(통계청, 2022.3.).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외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가계동향조사 또한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942년부터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표본 개편 등을 통해 조사방법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매월 가계부 조사를 실시하되, 분기 단위 소득과 지출 및 연간 지출 정보를 생산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분기별로 소득과 지출, 연간 지출 관련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분기별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한다(통계청, 2021.12.).

빈곤이나 불평등의 소득분배 지표는 대표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므로 자료원이 가계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원과 동일하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가 가구주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령집단이나

가구 유형별 소득분배 지표를 생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단,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는 국가별 조사자료를 생산하는 원칙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제화(harmoniz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지표값을 정제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지표 생산 원칙을 공유, 취합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각국의 소득분배 지표를 정제하여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2. 경제활동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기관은 없고, 근로빈곤율에 대한 개념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사회정책 동향 분석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근로빈곤율은 매해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임금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이미 OECD는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 제공하는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OECD, 2023a)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확인하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 통계는 과소 추정되어 실질적인 구직 취약계층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고(김성아 외, 2022),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율은 공식적으로 집계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 취약계층 지표로 어떠한 개념이나 변수가 활용될지를 우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 비율’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고 있는 청년 비율’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모두 매년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구직 취약계층의 현황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자료원으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공식 지정통계이다(통계청, 2023.9.). 1957년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해(Ibid, pp.3~5), 세계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Labor Force Survey의 권고를 따라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EU 등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Ibid, p.10). 현재 전국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매월 1,700여 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시점마다 표본 가구의 일부를 연동하여 교체한다(Ibid, pp.19~2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에 관한 항목, 구직에 관한 항목, 구직 단념자에 관한 항목, 이전 일에 관한 항목 등을 조사한다(Ibid, pp.12~13).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파악하는 문항에서 쉬는 인구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Ibid, p.3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합해 연령집단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결과는 매월 전국 고용동향 보도자료로 공표되며 통계청 KO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3. 정책 수요 및 공급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등을 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보건복지부, 2023.7.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된다. 산정된 기준중위소득 값은 매년 개최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및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소보장 수준의 결정 등)에 의해 차년도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되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그 기반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된다.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의 지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률을 다룰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 및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자료이며, 2001~2009년은 지방행정정보망에 설치·운영된 복지정책 DB, 2010년 이후는 행복e음을 활용하여 작성된다. 통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일반 현황 및 소득·재산·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현황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의 작성 주기는 1년이며, 작성 기준연도 익년 7월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된다(보건복지부, 2021.12.).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공개된 통계나 행정 데이터가 부재하여,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보건복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별로 발간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일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긴급복지지원 실적에 대해 연도별, 시도별,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내부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참고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DB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월별, 시도별, 성별로 집계한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며, 상시적으로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다(복지로, 2023.8.). 해당 데이터는 복지로(bokjiro.go.kr)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통계는 각 연금사업의 수행 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 및 발표하는 국민연금통계를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통계는 매월 조사 및 생산되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 및 급여 현황, 장애·유족연금심사 현황, 심사청구 현황, 기금현황 등이 매월 공표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의 자료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표되는 공무원연금통계이다. 공무원연금통계는 수급자 현황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관련 지표를 매년 생산하며, 작성 기준연도 익년 5월에 공개된다. 해당 자료는 사전정보공개 자료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보할 수 있다.

사학연금의 수급자 수는 사학연금공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개하는 행정자료 및 사학연금통계연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전정보공개 자료로 사학연금의 수급자 현황 자료를 매년 5월에 공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에서 연도별, 종류별, 연령별 수급자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어 행정자료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군인연금의 수급자 수는 국방부의 군인연금·군인재해보상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인연금·군인재해보상 통계는 국방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작성 기준연도 익년 6월에 발표하는 통계자료이다. 해당 통계에서는 군인연금 관련 주요 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도별 수급자 수 추이, 연령별 수급자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국방부, 2023.6.2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는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연금 현황(연금 수급자 수, 월별 연금 현황) 자료를 매월 30일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자 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에 관리 주체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원자료를 확보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공공연금의 종류별 가입자 및 수급자 수, 급여비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 수급률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부재하나 통계청에서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 및 정리하여 매년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연금의 연령별 수급자 수 데이터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자료원으로 OECD에서 발표되는 총연금

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중 의무적·공적 연금(Mandatory public)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국가 간 연금 관련 지표 및 통계 비교를 위해서 각 국가의 연금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고, 한눈에 보는 연금 데이터베이스(Pensions at a Glance database)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OECD, 2023b). 총 연금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생산주기가 상이하기에, 국제 비교에서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연금 제도가 상이하여 국가 간 비교에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OECD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지표는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김성아 외, 2023).

4. 주거

주거 분야 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지표의 주된 자료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생산하는 주거실태조사이다.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국토연구원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및 특수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총 59,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한다.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소득과 자산 등 가구 일반사항,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다만,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자기응답식 조사가 가지는 비표본오차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조사 기준연도의 익년 10월에 결과를 공표하고,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한다(국토교통부, 2020.6.).

〈표 3-2〉 소득과 주거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가계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분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분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소득 분배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1년	집계치 (aggregated values)에 한해 가능	국제비교 (연령집단별)
	연령집단별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주요 기구 유형별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경제 활동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구직 취약계층	OECD Labor Statistics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통계청	1년 1월	집계치(aggregated values)에 한해 가능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국제비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정책 수요 및 공급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1년 (2015~2024년)	가능	가구규모별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집계치 확인 가능
	간접복지지원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	-	
	기초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DB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연금공단	상시 월	집계치에 한해 가능 집계치에 한해 가능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통계집	공무원연금공단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공적연금/ (사학연금)	사학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공적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군인재해 보상 통계	국방부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공적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금현황	별정우체국연금 관리단	매월	집계치에 한해 가능	
주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Pensions at a Glance database	OECD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1년 (2006~202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 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1.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원 자료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12.). 이 조사는 승인통계로서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구 특성이나 생애주기, 소득, 지역 등으로 심층분석하여 정책 공급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Ibid, p.4). 사회서비스 수요와 실태에 대한 조사를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주기는 2년이다(Ibid, p.1).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및 지불 의사, 정책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Ibid, pp.12~21). 사회서비스 공급실태 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주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고용실태, 그리고 재정현황을 조사한다(Ibid, pp.12~21).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므로 조사 대상 범주가 조사 주기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은 제한될 수 있다.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아동학대통계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생산, 관리한다. 1년을 주기로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집계치(aggreated values)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층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 내 원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통계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생산,

관리한다. 역시 1년을 주기로 발간하는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원자료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학대통계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생산, 관리한다. 1년을 주기로 발간하는 「노인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역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내 원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심층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은 장애인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3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통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산 및 관리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자료 역시 사회보장정보원 내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심층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다. 1년을 주기로 발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원자료가 있지만 외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심층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을 국제비교할 수 있는 자료원은 OECD Health Statistics이다. 지표명은 장기요양 수급률(Long-term care recipients)이고, 수급자 수와 수급률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OECD에 의해 국가별 자료가 1년 단위로 집계되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을 자료원으로 쓸 수 있다. 자료는 수시로 집계되지만 생산 및 관리 주체가 제공하는 집계 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가족부 내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 심층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원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이다 (통계청, 2022.12.). 통계청에서 1년을 주기로 생산하는 지정통계이다 (Ibid, p.1). 목표 모집단은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Ibid, p.18). 조사 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기본적 특성과 대표자 특성, 창설연월, 조직형태 및 사업체 구분 관련 특성, 산업분류 결정 관련 항목, 종사자 수 관련 항목, 매출액 및 시도별 자율항목을 조사한다. 이때, 사업의 종류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는 지역별고용조사를 자료원으로 쓸 수 있다 (통계청, 2020.10.). 통계청이 매년 4월과 10월, 반기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Ibid, p.4). 조사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Ibid, p.41),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23만 4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Ibid, p.27). 인적 사항,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이전 일에 관한 사항 등을 상반기 및 하반기 공통으로 질문한다(Ibid, pp.22~32). 4월에 실시하는 상반기 조사에서는

부가 항목으로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자녀 특성에 따른 여성의 고용 특성을 조사하고, 10월에 실시하는 하반기 조사에서는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 현황을 조사한다(Ibid, p.4). 제10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제7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직업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어(Ibid, pp.22~32),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차하여 심층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소분류 코드까지, 전국 단위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대분류 코드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코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표 3-3〉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 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사회 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조사 대상 범주 범용으로 시계열 분석 제한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아동) 아동학대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고서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내 원자료 접근 제한
		(장애인) 장애인학대통계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보고서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 가능	중앙장애인권익옹 호기관 내 원자료 접근 제한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노인) 노인학대통계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년	「노인학대 주요통계」보고서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 가능	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 내 원자료 접근 제한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has.a.re.kr/)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사회서비스 전자배우처	사회보장정보원	수시	생산/관리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치에 한해 이용 가능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 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고서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지에 한해 이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원자료 접근 제한
		OECD Health Statistics	OECD	1년	집계지에 한해 가능	국제비교
사회 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노동시장 성과	아이돌봄서비스 사업현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시	생산/관리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집계지에 한해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 내 원자료 접근 제한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반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자료: 연구진 작성

제4절 인구 분야

1. 인구(정태·동태)

인구 규모는 다양한 인구집단별 인구수를 파악하는 정태적 인구 지표이며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파악하는 정태적 인구 지표이다. 인구 규모와 부양비를 측정하는 자료원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규모와 제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구 규모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원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5년을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 및 주택규모 등 기본항목은 전수조사 항목으로 매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전수조사 항목은 인구 영역 8개 항목, 가구 영역 1개 항목, 주택 영역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 영역에서는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 연월, 1년 전 거주지, 국적 취득연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가구 영역에서는 가구 구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영역에서는 거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 및 주택규모 등 기본항목 외에 세부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항목은 전국의 2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방식으로 5년마다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1년 주기로 생산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은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통계청으로 수집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에서 매년 가공통계를 생산하고 5년 주기로 조사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인가되어 제공되는 영역은 전수 인구, 전수 가구, 전수 주택 등이다. 전수 조사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는 1년을 주기로 익년 7월에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된다.

인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자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자료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이다. 주민등록인구는 매달 업데이트되어 최신의 자료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인 거주불명자(2010년 10월부터 통계에 포함)와 외국에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출국한 인구 등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 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인 재외 국민(2015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을 포함하여 전수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다 인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태적 인구 영역의 인구이동률은 국내 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이다. 국내 이동과 관련된 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인구이동률의 분모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에 접수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토대로 전입신고 중 읍면동 경계를 넘은 거주지 이동 건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동·읍·면을 통해 중앙주민전송망 센터로 전송되고 이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중계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수집된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통계청의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에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 보고 단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거주지 이동자 중 읍면동 경계를 벗어난 경우이다. 보고 항목은 전입 연월일, 전입지, 전입 구분, 전입 사유,

전출지, 전출 구분, 전입자 생년월일·성별·세대주 여부 등이며 작성 항목은 이동자 수, 이동건수, 이동률 등을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전입 사유별, 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출입 규모와 같은 지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계는 월별로 공표되며 작성 기준 월의 익월에 동읍면 단위로 볼 수 있다. 보고 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이다. 즉, 월간 통계는 익월 말(매분기 월말, 분기 내용 추가)에 발표되고 연간 통계는 익년 1월 말에 발표된다.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이용 시에는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이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가구

1인가구 비율 지표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구의 한 유형으로서 1인가구의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1인가구 비율과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을 측정하는 자료원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이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5년을 주기로 수행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1년을 주기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 및 가구는 기본항목이고 전수조사 항목으로 매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인구 영역의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 연월, 1년 전 거주지, 국적 취득연도 등의 항목과 가구 구분 항목이 매년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는 항목이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통해 자세한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가구의 양적, 구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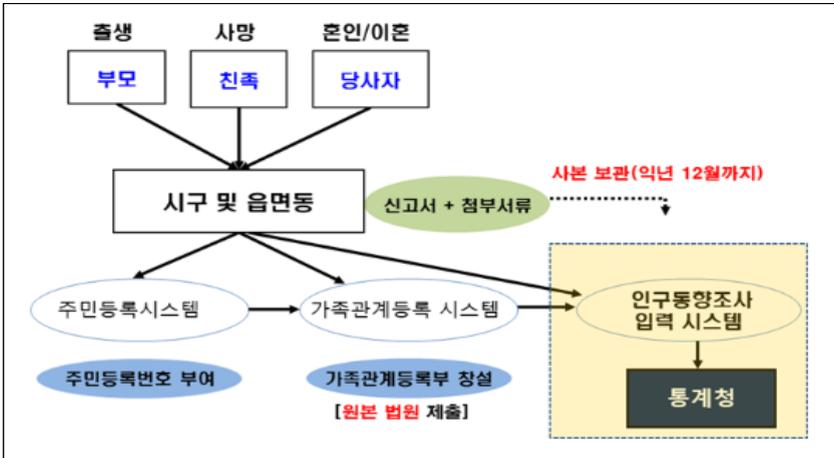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가족 형성과 해체 양상에 대비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래가구추계를 생산하고 있다(통계청, 2022a). 장래가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종합하여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에 대한 가구주의 비율인 가구주율을 적용하여 가구를 산출하여 작성한다. 장래가구추계는 5년을 주기로 공표되고 있으며 전국 및 시도별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 가구주의 연령·가구 유형별 추계가구, 가구주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 가구 유형·가구원 수별 추계가구, 가구주의 연령·가구 유형·가구원 수별 추계가구, 1인가구의 성·연령별 추계가구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장래가구추계는 근래에 발생하는 가구 변화의 추세가 장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전망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전망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추계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전망치의 오류 수준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래가구추계에서 활용되는 가구에 있어서 전망 기준시점이 가구추계의 경우는 7월 1일이고 인구총조사는 11월 1일이므로 두 자료의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통계청, 2022a). 1인가구 비율과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지표와 관련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3. 혼인·출산

인구 분야 혼인·출산 영역의 지표인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조혼인율을 측정하는 자료원은 인구동향조사 데이터이다. 인구동향조사(승인번호 :

제101003호)는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 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통계청, 2022b),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행되고 있다.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4종 신고 이외에 기아발견 조서, 실종신고, 혼인취소 신고 내용을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사항을 통계청으로 송부,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한다.

[그림 3-1] 인구동향조사 업무흐름도



자료: MDIS. (n.d.). 인구동향조사.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8&itmDiv=1&nPage=3&itemId=2001&itemNm=%EC%9D%B8%EA%B5%AC> 에서 2023.10.2. 인출

인구동향조사의 조사표는 대법원의 가족관계신고서 서식을 활용하여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기존 가족관계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족관계신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구축된다(통계청, 2023). 조사의

주기는 매월이며 통계의 공표 주기는 매월, 분기, 연간으로 되어 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관련 조사항목은 관련된 4가지 신고서를 통해 수집된다. 출생신고서를 통해 신고일자, 출생자 및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 신고인 등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망신고서를 통해 신고일자, 사망자 및 신고인에 관한 사항, 사망원인, 사망 종류 등이 수집된다. 혼인신고서를 통해 신고일자, 혼인 당사자에 관한 사항, 증인, 동의자,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국적, 혼인 종류 등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혼신고서를 통해 신고일자, 이혼 당사자 및 부모에 관한 사항, 재판 확정일자, 친권자 지정, 제출인, 19세 미만 자녀 수, 국적 등이 수집된다.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지표는 이 중 출생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출생통계를 통해서 산출된다. 출생통계는 합계출산율 산출 외에도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출생아 수에 비례한 지역별 산부인과 병상 수 및 의사 수요를 예측하고, 육아용품 수요를 예측하며 육아비용을 산정하고 연도별 교육시설 투자 비용을 추정하며 장래 노동 공급량을 예측하고 병역자원 수급 정책의 수립에 활용된다. 또한, 지역별 인구증가에 따른 저축 수준 및 투자수요 예측, 출산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출산력 변동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 변동 추정 등에 활용된다. 한편, 조혼인율 지표는 이 중 혼인 및 이혼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된다.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조혼인율 지표와 관련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공표되는 통계의 추정 또는 잠정 결과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 자료의 보정, 내용 검토 등으로 확정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도 통계표 중 「출생·사망편」은 출생자와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이혼편」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돌봄·양육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를 산출하는 자료원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이다.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52호인 생활시간조사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와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국민의 생활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된다(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결과는 “삶의 질, 일·가정 양립 측정 및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각종 복지, 문화, 교통 정책, 수립과 학문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통계청, 2019) 활용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 관련 항목과 개인 관련 항목의 경우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시간일지 항목은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기준 표본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인 개인으로 829개 조사구 내의 12,435가구(조사구당 15가구 선정) 내 약 29,000명의 가구원이다. 가구 관련 조사 항목으로는 1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돌봄 필요 사유와 10세 미만 개인을 대상으로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재학 여부, 오후 돌봄 형태 항목을 조사하고 분거가구 여부 및 사유, 거처 종류 및 주거용 연면적, 점유형태, 가구소득 등 12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관련 사항으로 시간 압박 여부 및 향후 줄이고 싶은 시간, 일과 후 피곤함 정도 및 이유, 삶 만족도, 여가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교육 정도, 경제활동 여부 및 일하지 않는 이유, 산업 및 사업체 형태, 직업, 종사상지위 및 직업형태, 주업 및 부업시간, 휴무형태, 개인소득 등 1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시간 일지와 관련된 항목으로 주행동, 주행동 시 ICT 기기 사용, 동시행동, 동시행동 시 ICT 기기 사용, 장소 및 이동수단, 함께한 사람, 시간활용 기분 상태, 건강상태, 근무(등교)일 여부, 시간일지 작성일의 방문자, 시간일지 작성자 등 1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 시간조사의 조사 주기는 5년으로 연도의 끝자리가 4, 9인 해이며 공표 주기는 5년이다. 결과의 공표 시기는 조사 기준연도 익년 7월이다. 성별 가사노동시간 지표와 관련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수인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이므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주요 지표는 통계청의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92호)인 육아휴직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를 통해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에서 최종 수집하여 작성한다. 이때 활용되는 행정자료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 인구동향 출생·사망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등 총 11종이다. 작성 대상은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및 공무원이며 군인의 경우는 행정자료상 파악이 불가하여 제외된다. 또한 고용보험 자료의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작성 대상이 된다. 작성 항목은 성별, 부모·자녀 연령별, 기업체 규모별, 산업분류별 육아휴직자 수,

육아휴직 대상자 수,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분할사용 현황,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중, 전체 출산휴가자 수, 출산휴가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연계율 등이다. 육아휴직통계는 1년을 주기로 공표되며 작성 기준 연도 익년 12월에 잠정 통계가 공표되고 익익년 12월에 확정 통계가 공표된다. 육아휴직통계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통계와 관련하여 인가되어 제공되는 영역은 육아휴직 행태, 전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중,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등이다. 육아휴직통계는 행정통계, 이용센터 서비스로만 제공된다.

육아휴직통계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특정 연도의 육아휴직자 수는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수라는 점이다. 또한, 육아휴직통계에서 산출한 육아휴직자 수가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집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통계 산출을 위해 육아휴직자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와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자 자료를 함께 활용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시점 간에는 대체로 최대 2년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시점 간의 시차 때문에 육아휴직통계의 잠정 통계와 확정 통계 모두에서 해당 시점의 육아휴직 현황이 과대 집계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군인과 같이 고용보험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통계에서 제외되므로 통계에서 산출한 육아휴직자 수는 실제 육아휴직자 수보다 적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통계청, 2021).

〈표 3-4〉 인구 분야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권리주체	생산 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인구	집단별 인구 규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부양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월		
가구	인구이동률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1인가구비율					
혼인·출산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월		
돌봄·양육	조출생률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조혼인율					
돌봄·양육	성별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성별 육아휴직자 수	고용보험 DB 자료	고용노동부	1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가능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자료: 연구진 작성

제5절 사회보장 일반

1. 행복·삶의 질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 점수는 두 가지 자료원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국제비교 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공개하는 160여 국가의 평균 행복 점수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매년 실시하는 갤럽 월드 폴을 원자료로 하여 UN에서 지정한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인 3월 20일을 기점으로 세계행복보고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worldhappiness.report/). 마이크로데이터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내 심층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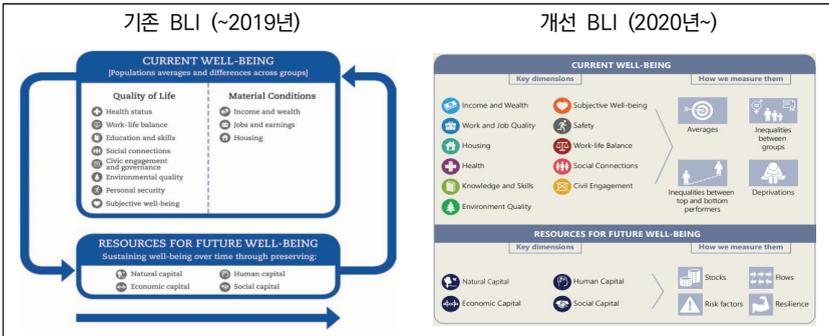
두 번째 자료원은 한국복지패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생산하며 차년도 4월 중에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www.koweps.re.kr:442/main.do).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심층분석을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 점수는 승인통계 중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 조사는 승인통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삶의 만족을 포함한 OECD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통계 산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20.9., p.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비교를 위한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를 원자료로 한다. 이 자료의 경우

2013년에 11개 영역의 세부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에 지표체계 개선이 이루어졌고, 개선된 11개 영역별 지표를 중심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OECD, 2020). 그 결과 지표 자체의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자료의 이용가능성은 제약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 삶의 질 추세를 국제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자료원은 제한적이다.¹⁾

[그림 3-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다 나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지표체계 변화



자료: 1)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p.22.
 2)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p.21.

사회적 고립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보유 여부로 측정하고 있다(김성아, 2022). 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친지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에 주목하는 OECD의 지표와 같은 맥락이다.²⁾ 사회적 지지체계, 혹은 사회적 고립을 국제비교할

1) 통계청에서 국내 삶의 질 지표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2) OECD. (2023c). Social support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cfbe26f-en 2023.10.2.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원은 갤럽 월드 폴이다. 이 조사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냐(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는 질문을 활용한다 (Helliwell et al, 2022). 마이크로데이터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하순에 세계행복보고서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조사 결과치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회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격년에 따라 조사 주제를 달리하는데, 매 홀수년에 복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과 함께 사회참여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가구원 조사 중에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다음 그림의 세 가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질문한다. 이 조사 결과는 매년 공표하며, 조사 기준연도 익년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문항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갤럽 월드 폴에 의한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림 3-3]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문항

사회적 관계망	
<p>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p> <p>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p> <p>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p> <p>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p>	<p>21-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십니까? 교류한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p> <p>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p> <p>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p> <p>3. 지난 1년 동안(2020. 5. 12.~2021. 5. 11.)의 하루 평균 교류하는 사람 수가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p> <p style="text-align: right;">감소한 주된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p>
<p>참고 21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사 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 복지 단체의 활동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1-1항의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p>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표(가구원). 대전: 통계청, p.7.

2. 사회인식

갈등 및 차별 인식 지표에 관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매해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보고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2013년에 시작한 이 조사는 갈등과 차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 및 차별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o)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지표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이 조사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중앙정부 부처, 국회, 시민단체, 신문사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하므로 사회적 자본의 변화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조사³⁾는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 연구 단체로, 1981년 유럽 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tudy)를 원류로 현재 1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하는 국가는 공통문항을 포함하는 조사표를 공유하며, 5년을 주기로 하는 웨이브(wave)별로 국가별 1회 조사를 실시한다. 세계가치관조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자료는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재정패널조사의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를

3) World Values Survey. (n.d.). Retrieved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2023.10.15.

통해 확보할 수 있다. 2016년에 실시된 9차년도 설문조사부터 재정패널 조사에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되었다. 현재 재정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각각 과대 표집하는 특성을 가진다.⁴⁾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www.kipf.re.kr/panel/)에서 가구용 및 가구원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재정

사회지출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지표는 국제비교를 통해 사회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서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려해 정제한(harmonized)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에서는 사회지출(social spending) 수준과 구성의 국가별 추세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하 SOCX)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재정 및 지출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공유하고 있다(Adema, W., & P. Fron, 2019). 최근 가이드북에 따르면, SOCX는 노인(old-age), 유족(survivors), 근로 무능력(incapacity-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실업(unemployment), 주거(housing), 그리고 기타 영역(other social

4) 재정패널조사. (n.d.). 표본설계. https://www.kipf.re.kr/panel/intro_Design.do 에서 2023.10.15. 인출.

policy areas)의 정책 분야별 지출을 종합한다. 지출은 현금급여와 현물 급여로 세분화한다(Adema & Fron, 2019, pp.16~21).

또한 지출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재분배 기제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 민간사회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과 자발적 민간사회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의 목적별 사회지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Adema & Fron, 2019, p.13),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사회지출을 주로 활용한다.

SOCX의 자료원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데, 행정자료(administrative records)와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에 의한 추정치, 그리고 조사자료(microdata)를 활용한다(Adema & Fron, 2019, pp.27~31). 국가별 자료의 생산 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이용할지라도 시점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민부담률은 경상 GDP에서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조세부담률은 그중에서도 사회보장 부담률을 제한 비중이다(김성아 외, 2022, p.202). GDP와 조세 자료를 이용해 생산하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재정통계를 주된 자료원으로 활용한다.

다만,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SOCX와 같이 비교를 목적으로 정제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에서는 조세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 of GDP)과 사회보장부담률(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이용해 두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OECD, 2021).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 즉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등의 분야에 지출한 결산액이 총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방재정365, n.d). 1년 동안의 결산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연간 자료이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결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이나 불용액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4. 거시지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국가 차원에서 경제 상황이나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시지표로, 동향 분석 시 국내 추이와 함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자료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국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며(한국은행, 2019), 대표적으로 IMF의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을 활용할 수 있다. 실질 GDP 성장률은 IMF가 관리하는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는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 세트이며, 매년 4월과 9월(또는 10월)에 발표된다(IMF, 2023).

IMF에서 제공하는 물가상승률 관련 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구 내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IMF, 2023.10.6.). 해당 지표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할 수 있다.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는 국민소득, 금융, 재정, 무역, 환율, 물가, 국제

유동성 등을 다루며, 200개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IMF, 2023.10.2.).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서는 나라별 CPI의 월, 분기, 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표로 연평균 기온 편차,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온도 및 높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감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결과, 영향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시스템은 기후를 특징짓는 주요 변수(대기, 해양, 육상 등) 35개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연평균 기온 편차,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온도 및 높이 등 기후변화 지표를 확인 및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시스템, 2023.10.9.).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예, 자외선 지수와 피부질환자 수), 국제 비교 자료 등 연관 정보도 제공된다. 이러한 점은 사회경제 분야의 지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 등과 같이 새로운 기후변화 지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5〉 사회보장 일반의 개선한 동향 분석틀 지표 특성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 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행복·삶의 질	삶의 평가	갤럽 월드 폴/세계행복보고서	갤럽	1년	세계행복보고서 홈페이지(https://worldhappiness.report/)에서 매년 3월 말 보고서 2장 부록으로 집계치에 한해 이용 가능	국제비교 (국가)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www.koweps.re.kr)에서 매년 3월 말 이용 가능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삶의 만족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국제비교 (국가)
		갤럽 월드 폴/세계행복보고서	갤럽	1년	세계행복보고서 홈페이지(https://worldhappiness.report/)에서 매년 3월 말 보고서 2장 부록으로 집계치에 한해 이용 가능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사회적 고립	사회조사	통계청	통계청	2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같은 및 차별 인식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사회 인식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mdis.kostat.go.kr/index.d)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세부 영역	개선한 측정지표	자료원	생산/관리주체	생산 주기	이용가능성	비고
사회 보장 재정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세계가치관조사	5년	세계가치관조사 홈페이지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jsp)에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국제비교 /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총사회지출	OECD SOCX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년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심층분석 가능
	분야별 사회지출	OECD SOCX	OECD	상시	집계치에 한해 가능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상시	집계치에 한해 가능	국제비교
거시 지표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경제성장률	World Economic Outlook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반기	집계치에 한해 가능	국제비교
	물가상승률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월, 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국제비교
	기후변화	핵심기후변수	기상청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1년	집계치에 한해 가능	

자료: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국내 사회정책 전반의 주기적인 동향의 종합 분석이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동향 분석틀을 개발하고 정책 분야별 동향 분석을 시도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2022)」의 후속 작업으로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소득과 주거 및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보장 동향 보고서와 한국 사회보장 동향 분석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영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둘째, 여전히 주기적 정책 동향 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22년 기초 연구에서 작성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고 DB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과업이 이 연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학계 전문가, 정책결정자, 그리고 언론인 등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응답자는 103명이다(〈표 2-2〉 참조). 그중에서 학계 전문가는 65명으로 63.1%, 정부기관에 소속된 정책결정자는 12명으로 11.7%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은 26명으로 25.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가 7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건의료 분야 전공자가 18명, 그 외 분야 전공자가 8명이었다. 또한 전문가 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2장에서 보건의료, 소득과 주거, 사회서비스, 인구, 사회보장 일반의 5개 분야별 성과 및 동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였다(〈표 2-15〉, 〈표 2-31〉, 〈표 2-40〉, 〈표 2-52〉, 〈표 2-67〉 참조).

제3장에서는 개선한 동향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회정책 성과 동향 지표 DB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원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원의 생산 및 관리주체, 생산주기와 실질적 이용가능성, 그리고 DB화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표 3-1〉, 〈표 3-2〉, 〈표 3-3〉, 〈표 3-4〉, 〈표 3-5〉 참조). 예를 들어, OECD 등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원은 집계치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거나 사회서비스 분야 동향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구체화하기를 시도한 사회정책 동향 분석의 기틀은 향후 주기적인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및 DB 구축, 이용자 편의적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관련 활동은 빈곤통계연보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구용역(예를 들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OECD SOCX)를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 각 연구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변화와 과업의 확정 등이 필요하다.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방안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정례화와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 성과 동향 지표 DB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지표의 범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정책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모든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표 생산 시점이 작성 주체에 따라 상이하므로(monthly, quarterly, annually, biannually 등) 주기적으로 동향 분석 DB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통계치(statistics)를 보여주거나 단순지수(indicator)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계열 지수 등에 대한 개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하여 가장 실효성 높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 분석에 필요한 자료원들을 검토하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주요 정책 데이터 관리 기관과의 협업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관리 기관의 자료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실태조사 사업을 추가 개발,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정책 인식과 선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정리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거나 별도의 포털사이트(예를 들어, 보건복지데이터포털)를 통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널리 배포하여야 주기적 동향 분석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성,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관계 통계집과 같이 수집된 자료들을 정기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이나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정책 관련 통계들을 망라하는 포털은 분석 결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포털의 구축은 유사 통계 포털들과 중복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우선은 정기적 동향 분석 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표의 수집주기를 고려하여 월간, 분기, 연도별 자료 제공이 가능한 지표를 구분하여 정기적인 통계집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사회정책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 상황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향 분석의 주요 필요성 중 하나는 현재 사회 상황의 변화를 포착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 성과 측정이나 변화 예측이 가능한 프레임워크 또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과 같이 최종 성과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모델링할 수 있다면 정책 산출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정책 산출의 화폐적 가치 등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모델링을 통해 '고립'의 사회적 비용 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회정책을 확대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정책적 수요가 있는 양육비의 변화 추계와 같이 행위자들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수치화하는 작업도 유용할 수 있으며, 인구변동과 같이 주요 추세를 예측하는 작업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분석된 여러 자료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잡한 사회 현상을 수치로만 제시할 경우 비전문가들이 그 변화나 양상의 규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의 여러 방식을 적용해보고,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 수요자들이 쉽게

시각화 방식을 선택하고 자료를 재구성하여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개발 과정에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작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가 요청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향 분석 관련 성과를 낸 타 기관들의 경우 상당한 인적 자원의 배치가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사전에 기획 과정과 지표의 개발, 프레임워크 및 모델 구축 등의 사전·사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인력이 오랜 기간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투자 없이는 단발적인 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1. 국내 문헌

- 강신욱, 노대명, 박수진, 전지현. (2011).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II)**.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박세경, 정해식, 김보영, 안혜영, 성은미, ... 이정은. (2015). **지역사회보장 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함영진, 정해식, 김동진, 안수란, 오욱찬, ... 김태은, 김진희, 이주민, 안정기. (2018).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방안 마련 및 현황 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희정, 신영석, 윤강재, 지영진, 하솔잎, 김현규. (2019).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든솔, 박나영. (2023).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토교통부. (2020.6.).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김성아, 노현주, 안수란, 이소영, 조성은, 고든솔, 신영규. (202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3).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2022).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115-152.
-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자, 박실비아, 정연, 최슬기, 김수진, 강혜리, 김보은. (2019). **의약품 안전**

-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12.).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정보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7.28.). **행정용어한글차이-기준중위소득.** 세종: 보건복지부.
- 송철중, 김성아, 곽윤경, 최혜진, 모춘홍, 한준성, ... 정다희. (2020). **지역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연구: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신화연, 최기홍, 김종훈, 신승희. (2020).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이정은, 박세경, 류정희, 유재언, 최유진. (2022).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이행점검 평가지표 체계 개편.**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성은, 이상정, 전진아, 조영림. (2020).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미, 이상림, 박종서, 강욱모, 오신휘, 임지혜. (2019).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이소영, 정희선, 고제이, 김세진. (2022).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이지혜, 이선희, 이소영, 박종서. (2023).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연구.**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진아, 오미애, 이난희, 이수형, 박은자, 차미란, ... 손선주. (2018). **국가 정신 건강현황 통계 지표 심층 분석.** 서울: 국립건강정신건강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정세정, 박윤경, 정홍원, 이다미, 김진영, 전지현. (2021). **포용국가 사회 통합지표 개발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김예슬, 민기채, 김현진, 강미진, 윤지현, ... 현인애. (2021). **남북한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류진아, 이요한, 강미진, 안경수, 하신, ... Sempungu Joshua Kirabo. (2022).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표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민희, 오유미, 윤석준, 오인환. (201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수명 지표 산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최현수, 한솔희, 천미경, 진재현. (2019).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 기반 사회정책 통계 지표 개발**.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0.10.).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표(가구원)**.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1.12.).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2.12.).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2.3.).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3).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3.9.).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한국은행. (2019).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서울: 한국은행.
- 한국행정연구원. (2020.9.).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황남희, 이아영, 이상정, 오미애, 정해식, 김문길, 이주연. (2019). **자영업자에 대한 삶의 질 현황 및 지표개발 연구**. 대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m, Seonga, Shin, Young-Kyu, Lim, Deokyoung, Noh, Hyunju, Kang, Yuku. (2023). **Korean Social Security Trends in Indicators:**

Income and Housing.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 해외 문헌

Adema, W., & P. Fron.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aris: OECD Publishing.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21). *Revenue Statistics: Interpretative Guide*. Paris: OECD Publishing.

3. 인터넷 인출 자료

MDIS. (n.d.) **인구동향조사**.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8&itmDiv=1&nPage=3&itemId=2001&itemNm=%EC%9D%B8%EA%B5%AC> 에서 2023.10.2. 인출.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n.d.). <http://laborstat.moel.go.kr/> 에서 2023.10.1. 인출.

국방부. (2023.6.28.). **사전정보공표-군인연금·군인재해보상 통계집**.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handle=I_10702404&siteId=mnd&id=mnd_010303000000 에서 2023.10.4. 인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n.d.). <https://data.kihasa.re.kr/> 에서 2023.10.1. 인출.

- 복지로. (2023.8.). **기초연금 수급자 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56&datsClNo=1071&datsClCrit=WS> 에서 2023.10.4. 인출.
- 재정패널조사. (2022.12.23.). **데이터**. <https://www.kipf.re.kr/panel/data/AllList/paData/view.do?cntNo=33> 에서 2023.11.17. 인출.
- 재정패널조사. (n.d.). **표본설계**. https://www.kipf.re.kr/panel/intro_Design.do 에서 2023.10.15. 인출.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시스템. (n.d.). **자료 다운로드**.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oneDepth=6&twoDepth=26&threeDepth=91&4d=Sealevel:2:1 에서 2023.11.17. 인출.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시스템. (2023.10.9.).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시스템 소개**.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tro/main_intro 에서 2023.10.4. 인출.
- 지방재정365. (n.d.). **사회복지비비율**. <https://www.lofin365.go.kr/portal/LF2220000.do?tab=cntry&byatcClsTy=LCTSSSTL41&pfaIndcCd=A011&rgnzDvCd=01&fyr=2021> 에서 2023.10.2. 인출.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n.d.). mdis.kostat.go.kr/index.do 에서 2023.10.1. 인출
-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52>에서 2023. 11. 15 인출,
- 통계청. (2021). **육아휴직통계 통계정보보고서**.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92>에서 2023. 11. 12 인출
- 통계청. (2022a). **장래가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https://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62>에서 2023. 11. 15. 인출.
- 통계청. (2022b). **인구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s://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03&inputYear=2022>에서 2023. 11. 15 인출.

- 한국복지패널. (n.d.). **데이터&설문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에서 2023.11.17. 인출.
-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 (n.d.). <https://www.khp.re.kr:444/> 에서 2023.10.1. 인출.
-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n/Publications/SPROLLS/world-economic-outlook-databases#sort=%40imfdate%20descending> 2023.10.2.
- IMF. (2023.10.2.). *Consumer Price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 S)*. Retrieved from <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179b> 2023.10.2.
- IMF. (2023.10.6.). *Consumer Price Index(CPI)*. Retrieved from <https://data.imf.org/?sk=4ffb52b2-3653-409a-b471-d47b46d904b5> 2023.10.2.
- OECD. (2023c). *Social support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cfbe26f-en 2023.10.2.
- OECD. (2023a).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3.10.4.
- OECD. (2023b). *Pensions at a Glance*.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data/oecd-pensions-statistics/pensions-at-a-glance-2011_data-00625-en 2023.10.4.
- World Values Survey. (n.d.). Retrieved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2023.10.15.

4.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9228호 (2023).
-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 주민등록법, 법률 제19228호 (2023).



[부록 1]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연구책임자: 김성아 부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 DB 구축 및 정기적인 간행물 발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및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연락처, 소속기관, 전공 등)는 응답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용도 이외, 수집하거나 분석에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5.

-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김성아 부연구위원
- 연구 관련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노현주 연구원

상기의 내용에 동의하시고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동의 안 함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2년 사회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을 작성하였습니다.

분야	세부영역	측정치표	국제 비교	시계열 분석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①기대여명, 건강수명 ②주관적 건강상태 ③자살률 ④우울감 경험률	✓ ✓ ✓	✓ ✓ ✓ ✓
	건강행태	①흡연율 ②음주율 ③비만율		✓ ✓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①미충족의료 경험률 ②국민건강보험 보장률 ③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④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	✓ ✓ ✓ ✓
소득보장 분야	가계	①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②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③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④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 ✓ ✓ ✓
	소득분배	①(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②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③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	✓ ✓ ✓ ✓
	경제활동	①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②구직 취약계층(장기실업자 비율 등)	✓ ✓	✓ ✓ ✓
	정책 수요 및 공급	①기준중위소득 ②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③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 ✓ ✓
	주거	①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②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	✓ ✓

14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분야	세부영역	측정지표	국제 비교	시계열 분석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 서비스 수요	①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②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③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④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⑤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 ✓ ✓ ✓
	사회 서비스 공급	①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사업체 및 종사자) ②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 ✓
인구 분야	인구	①(정태) 인구 규모(성별, 연령별, 지역별) ②(정태) 부양비(아동, 노인) ③(동태) 인구이동률 ④(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성별, 연령별)	✓	✓ ✓ ✓
	가구	①1인가구(성별, 연령별) ②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가구원 수별 가구 및 다양한 가구(청년가구, 한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등))	✓	✓ ✓
	혼인·출산	①합계출산율 ②결혼이민자 비율	✓	✓ ✓
	돌봄·양육	①성별 가사노동시간 ②성별 육아휴직자 수		✓ ✓
사회 보장 일반	행복삶의 질	①행복 ②삶의 질 ③사회적 고립	✓ ✓ ✓	✓ ✓ ✓
	사회인식	①갈등 및 차별 인식 ②사회적 자본(신뢰 등) ③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 ✓ ✓
	사회보장재정	①총사회지출 ②분야별 사회지출 ③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④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 ✓ ✓	✓ ✓ ✓ ✓
	거시지표	①경제성장률 ②물가상승률 ③기후변화(기온 등)	✓ ✓ ✓	✓ ✓ ✓

Q1. 귀하께서는 향후 주기적으로 생산하거나 관리하여 분야별 사회 정책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각 지표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1-1. 보건의료 분야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건강 수준	①기대수명, 건강수명	-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 -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	①	②	③	④
	②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인지율 = (평소 본인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 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	①	②	③	④
	③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자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①	②	③	④
	④우울감 경험률	-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수 / 전체 응답자) × 100 - 우울증상 유병률 = (우울증선별도구 10점(/27점) 이상인 사람 수 / 전체 응답자) × 100	①	②	③	④
건강 행태	①흡연율	- 현재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 수 /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100 - 매일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 수 /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100	①	②	③	④
	②음주율	- 연간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 /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100 - 고위험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①	②	③	④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③비만율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 /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100 -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 ² 이상인 대상자 수 / 분석대상자 수)×100	①	②	③	④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①미충족의료 경험률	- 미충족 의료율 =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치료 및 검사 제외)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수 / 전체 응답자 수)×100	①	②	③	④
	②국민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 보장률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진료비)×100	①	②	③	④
	③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 (경상의료비 총액 / 국내 총생산)×100 -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 (가계직접부담 금액 / 경상의료비 총액)×100	①	②	③	④
	④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 재난적 의료비 = 가계지출의료비 / 생활비(가계총소비지출=식료품비) × 100	①	②	③	④

Q1-1-1. 앞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수정/보완 방안

Q1-1-2. 앞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삭제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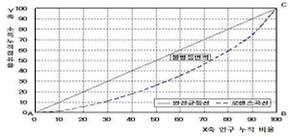
Q1-1-3. 앞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설명/정의	자료원

※ 추가 지표에 대해 1개 이상 의견이 있을 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가계	①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 빈곤율 =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수 / 전체 인구수) × 100 - 지니계수 = 불평등면적 / △ABC	①	②	③	④
	②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①	②	③	④
	③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①	②	③	④
	④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①	②	③	④
소득 분배	①(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①	②	③	④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p>②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p> <p>③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p>	 <p>- 연령집단별 빈곤율 =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 /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수) × 100</p> <p>- 유형별 빈곤율 =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해당 유형 가구원 수 / 전체 해당 유형 인구수) × 100</p>	①	②	③	④
경제 활동	<p>①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p> <p>②구직 취약계층(장기실업자 비율 등)</p>	<p>- 근로빈곤율 =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해당 유형 가구원 수 / 15~64세 취업 인구 수) × 100</p> <p>- 저임금근로자 비율 = (월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p> <p>- 장기실업률 = (1년 이상 실업자 / 전체 실업자) × 100</p>	①	②	③	④
정책 수요 및 공급	<p>①기준중위소득</p> <p>②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p>	<p>-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p> <p>-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로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의 합</p> <p>-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전 국민 인구수) × 100</p> <p>-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p>	①	②	③	④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③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 -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노인인구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100 -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지원 횟수 - 연금별 수급자 수 = 각 연금의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 수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추계 인구) × 100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의무적 공적 연금액 비율	①	②	③	④
주거	①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①	②	③	④
	②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 월 임대료 / 중위 월 가구 소득) × 100	①	②	③	④

Q1-2-1. 앞의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수정/보완 방안

Q1-2-2. 앞의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삭제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이유

Q1-2-3. 앞의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설명/정의	자료원

※ 추가 지표에 대해 1개 이상 의견이 있을 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1-3. 사회서비스 분야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회 서비스 수요	①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 ((영역별) 서비스 이용 가구 / (영역별) 서비스 필요 가구) × 100	①	②	③	④
	②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 (만 0~17세 아동학대 판정 피해 아동 수 / 만 0~17세 아동 수) × 1,000 - 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 = (만 65세 이상 학대 판정 피해 노인 수 /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①	②	③	④

세부 영역	측정치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p>③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p> <p>④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p> <p>⑤노인 장기요양 수급률</p>	<p>× 1,000</p> <p>-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 = (학대 판정 장애인 수/ 등록 장애인 수) × 1,000</p> <p>-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 전체 인구 100명당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p> <p>-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 만 6~64세 등록 장애인) × 100</p> <p>-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률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만 6세 미만 미등록 아동)} × 100</p> <p>-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장기 요양급여이용 수급자 수 /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 100</p>	①	②	③	④
사회 서비스 공급	<p>①사회서비스 산업적 성과 (사업체 및 종사자)</p> <p>②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p>	<p>- 사회서비스 사업체 규모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산업 코드 사업체의 합</p> <p>- 사회서비스 종사자 규모 = 사회서비스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의 합</p> <p>-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 해당 집단의 사회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 전체 사회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 × 100</p> <p>-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수준</p> <p>-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p> <p>-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p> <p>-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p>	①	②	③	④

Q1-3-1. 앞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수정/보완 방안

Q1-3-2. 앞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삭제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이유

Q1-3-3. 앞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설명/정의	자료원

※ 칸에 구애하지 않고 지표 여러 개에 대한 응답을 주셔도 됩니다.

Q1-4. 인구 분야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인구	①(정태) 인구 규모 (성별, 연령별, 지역별)	- 인구 규모 = 국내 거주 인구(외국인 포함)	①	②	③	④
	②(정태) 부양비 (아동, 노인)	- 고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인구(0~14세)} × 100	①	②	③	④
	③(동태) 인구이동률	- 인구이동률 =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 해당 기간 전체 인구) × 100	①	②	③	④
	④(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 (성별, 연령별)	- 전입 규모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인구수 - 전출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인구수 - 순이동 = 전입 - 전출	①	②	③	④
가구	① 1인가구 (성별, 연령별)	- 1인가구 비율 = (1인가구 수/일반가구 수) × 100 - 연령별 1인가구 비율 = (해당 연령집단 1인가구 수/총 1인가구 수) × 100 - 성별 1인가구 비율 = (성별집단 1인가구 수/총 1인가구 수) × 100	①	②	③	④
	②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가구원 수별 가구 및 다양한 가구(청년가구, 한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등))	- 총가구 규모 =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수 - 가구 유형별 비율 = {해당 유형(1인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인가구)의 가구 수/ 일반가구 수} × 100	①	②	③	④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혼인·출산	①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 연령별 출산율(ASFR)/ 1,000	①	②	③	④
	② 결혼이민자 비율	- 결혼이민자 비율 =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수 / 전체 체류 외국인) × 100	①	②	③	④
돌봄·양육	① 성별 가사노동시간	- 가사노동시간 = 하루 평균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 + 가족돌봄에 사용한 시간	①	②	③	④
	② 성별 육아휴직자 수	- 육아휴직자 수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인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Q1-4-1. 앞의 인구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수정/보완 방안

Q1-4-2. 앞의 인구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삭제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이유

Q1-4-3. 앞의 인구 분야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설명/정의	자료원

※ 칸에 구애하지 않고 지표 여러 개에 대한 응답을 주셔도 됩니다.

Q1-5. 사회보장 일반

세부 영역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행복 삶의 질	①행복	- 행복 =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켈트릴 사다리 척도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0~10점)	①	②	③	④
	②삶의 질	- 삶의 질 =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소득, 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조화 영역에서 얻은 24개 측정지표 결과	①	②	③	④
	③사회적 고립	- 사회적 고립 =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①	②	③	④
사회 인식	①갈등 및 차별 인식	-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②사회적 자본(신뢰 등)	-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 -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정도 -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 언론사에 대한 신뢰 정도	①	②	③	④

세부 영역	측정치표	조작적 정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③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①	②	③	④
사회 보장 재정	①총사회지출	-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비중 - 1인당 사회지출	①	②	③	④
	②분야별 사회지출	- GDP 대비 분야별 사회지출 비중	①	②	③	④
	③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 경상 GDP) × 100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①	②	③	④
	④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 사회복지예산 비율 = (사회복지 분야 예산 /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 100	①	②	③	④
거시 지표	①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①	②	③	④
	②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 2010년을 100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출	①	②	③	④
	③기후변화(기온 등)	-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 관측 지점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평균 - 연평균 기온 편차 = 연평균 기온과 평년값의 차이 -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 연평균 해수면 높이를 1989년의 해수면 높이 0.0cm 기준으로 변환한 값 - 연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 = 연평균 해수면 온도와 평년값의 차이	①	②	③	④

Q1-5-1. 앞의 전반적인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수정/보완 방안

Q1-5-2. 앞의 전반적인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삭제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이유

Q1-5-3. 앞의 전반적인 사회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응답 가능)

지표명	설명/정의	자료원

※ 칸에 구애하지 않고 지표 여러 개에 대한 응답을 주셔도 됩니다.

Q2. 귀하께서는 앞에서 제시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의 분야 및 세부 영역 구성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해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세부영역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소득보장 분야	가계
	소득분배
	경제활동
	정책 수요 및 공급
사회서비스 분야	주거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공급
인구 분야	인구
	가구
	혼인·출산
	돌봄·양육
사회보장 일반	행복삶의 질
	사회인식
	사회보장재정
	거시지표

Q3. 귀하께서는 사회정책 영역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쟁점/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속기관

①학교/연구기관 ②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③언론 ④기타()

전공

①보건의료 분야 ②사회과학 분야 ③기타()

사례금 지급을 위한 휴대폰 번호

: _____ - _____ - _____